



04 • 권두언

문화융성의 시대, 시민들의 문화행복은? | 이동연

06 • 특집 | 문화융성의 시대, 충남의 미래는?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 박철희

충남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 양현미

행복한 충남,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략의 방향
| 전성환



26 • 충남논단

유휴 간척지의 갯벌복원에 관한 메커니즘 | 김종화
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 재정건전화 방향
| 신혜지 고승희

42 • 충남 마을 기행

5도 2촌 실천 앞장서는 공주 풀꽃이랑마을 | 정봉희

48 • 열린마당

어떤 참여인가 | 정완숙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 김현숙, 김영수



62 • 해외리포트

캐나다 퀘벡주, 지역속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 장효안 송두범

71 • 오피니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조직 육성에서부터 | 김병문
한국 사람만 모르는 3가지 진실 | 권오덕



77 • 충남 소식

80 • 연구원 소식

83 • 충남 문화유산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문화융성의 시대, 시민들의 문화행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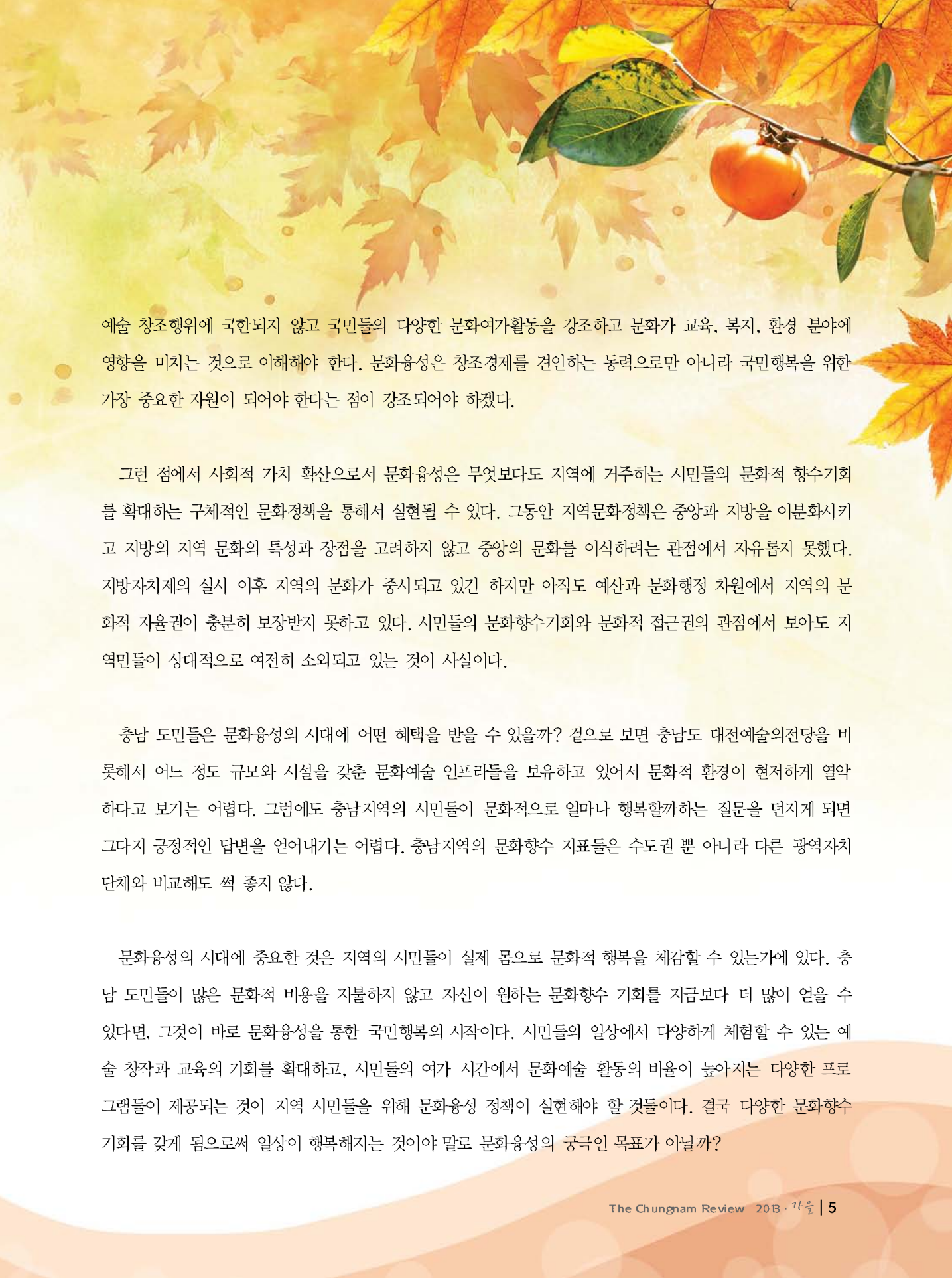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문화융성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청와대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실 문화융성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고 용어로만 보면 자율과 창조를 근간으로 하는 이 시대의 문화관에 비해 지나치게 계몽주의적인 관점이 강하다. 취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융성은 국가번영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번영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번영으로서 문화융성은 “문화가 국력”,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취임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문화융성은 국가번영, 창조경제의 동력으로만 이해되지는 않는다. 문화융성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바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다.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언급은 통상 번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화융성과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주의적인 문화모델이라기 보다는 일상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어울리는 말이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은 경제, 혹은 국력의 “수직적 상승하기”의 의미와 다르게 “수평적 스며들기”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융성은 경제적 번영으로서 의미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문화이다. 문화융성의 의미는 창작자들의



예술 창조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강조하고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융성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만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문화융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정책은 중앙과 지방을 이분화시키고 지방의 지역 문화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문화를 이식하려는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의 문화가 중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예산과 문화행정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와 문화적 접근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남 도민들은 문화융성의 시대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충남도 대전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인프라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문화적 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충남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행복할까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다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 어렵다. 충남지역의 문화향수 지표들은 수도권 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썩 좋지 않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역의 시민들이 실제 몸으로 문화적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가에 있다. 충남 도민들이 많은 문화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문화향수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의 시작이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창작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여가 시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지역 시민들을 위해 문화융성 정책이 실현해야 할 것들이다. 결국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일상이 행복해지는 것이야 말로 문화융성의 궁극인 목표가 아닐까?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박철희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장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2013년 2월 25일)에서 국정 비전으로서 '희망의 새 시대'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론으로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3대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문화가 국력의 핵심요소이고, 개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정책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②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며, ③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④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취임사 이후 그 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 문화정책 이념으로 제시된 '문화가 있는 삶',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화가 있는 삶,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과 국민행복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어 경제성장 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다. 높은 자살률, 우울증, 중산층의 감소, 소득 양극화와 문화여가 격차, 학교 폭력 등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진 데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인간은 〈그림 1〉과 같이 비전과 꿈,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감성 욕구 충족, 의미 부여, 힐링, 초월, 카타르시스, 소속감 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의 특성이 행복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¹⁾

The diagram is a concentric circle model for culture and arts. At the center is '문화 예술' (Culture Arts). The first ring contains four core elements: '창의성' (Creativity), '감성' (Sensitivity),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and '문화정체성' (Cultural Identity). The second ring contains four dimensions: '상징적의미' (Symbolic Meaning), '개인차원' (Personal Dimension),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and '사회차원' (Social Dimension). The outer ring lists 24 specific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including '국가보존도', '비전과 꿈', '사회적 관계', '자존감', '재미와 감성특구 충족', '의미무어', '행복', '행위', '문화요전인', '문화마케팅', '사회적 책임', '고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디자인', '창의 인재 양성', '세미조출 활성화', '교육정책 및 사회통합', '마을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학교문화재활용', '문화예술교육', '문화관광', '문화다양성', '도시재생', '무채간 정책협력', '창조경제', '국제교류', and '국가보존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논리와 가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를 대표하는 한 부분인 문화예술이 복지와 연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²⁾

The Chungnam Review 2013. 7th $\frac{2}{2}$ | 7

〈표 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

구 분	논리와 가치					
문화예술	정신가치	표출의 원리	수월성	집단주의	생존욕구	일반성
개인주의	정서적 욕구	창의, 독창성	복지	물질가치	수요의 원리	공유성

세부적으로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화를 통한 행복의 증진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정의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있는 삶’이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³⁾할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가 있는 삶’은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총체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⁴⁾ 삶의 현장 자체가 문화의 창조, 소비, 활용이 일어나는 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문화융성

문화융성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내용 범위적 측면과 영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용 범위적 측면에서는 보편 좁은 의미에서의 관점과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좁은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문화의 융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의 융성은 예술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역량과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문화의 융성은 창작의 가치와 향유의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 향유의 순환적 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의 위상과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문화를 통한 융성”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화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문화의 창조성, 다원성을 활용하여 경제, 외교, 교육, 복지분야에 접목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영역적인 측면에서는 ①문화 창조 및 보존, ②문화생활, ③문화 활용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⁶⁾

3) 문화 활동이 개인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 창의성, 사회적 관계 형성, 공동체 형성, 자존감, 힐링, 공감과 소통 욕구 충족, 위락 생활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

5) 이동연, 2013, 문화융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의 구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1차 자료집, pp15~16.

6) 영역적인 측면의 내용은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153~1154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 창조 및 보존'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발전,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창조산업의 발전 등 문화 자체의 융성에 관한 것이다.⁷⁾ 여기서 '문화'는 창의적, 정신적, 심미적, 지적활동의 산물을 의미한다. 문화 창조 및 보존의 축에서는 문화정체성의 확립, 문화 창조 활성화,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등이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둘째, '문화생활'은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적 삶의 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문화생활에서의 문화정책 이념으로는 문화권과 인권 확립,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 접근성 증진, 문화복지 증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이념 또한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논의 되고 있다. 셋째, '문화 활용'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타 영역과의 융복합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⁸⁾ 문화예술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국가 및 지역브랜딩, 국제교류, 공동체 형성, 관광산업, 콘텐츠산업, 기업문화마케팅 및 상품브랜딩, 힐링산업,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하며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문화 활용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이념 논의 또한 문화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유네스코는 문화정책 논의 초기부터 '문화발전'을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추진하여 왔다. 문화발전 이념은 문화발전이 경제,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정신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문화예술 지원의 준거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영광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Glorification) 논의도 기업, 도시, 국가위상, 국가의 브랜딩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공리주의는 문화예술의 공공효과를 문화정책

〈그림 2〉 문화융성의 세 가지 영역



자료 :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156

7) 문화 창조 및 보존은 문화생태계 구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문화정책 초기부터 중요정책과제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이 문화정책 영역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문화산업, 창조산업, 생활문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8) 문화예술은 상징적 의미와 감성, 창의성, 문화 정체성, 스토리텔링, 지적자산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의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공공효과로는 국가정체성의 확립, 사회적 응집력 강화, 국가위상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발전 효과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외부효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재화(cultural goods)는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재(merits goods)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문화관광 또한 문화공리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정책 현황과 정책적 과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⁹⁾

중앙정부에서 문화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화정책 영역별로 총 14개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렇게 많은 부처들이 문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렇지만 현재의 문화정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문화정책 영역별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다. 둘째, 문화정책 관련 부처 간 혹은 부서 간 조정자의 역할이 미흡하다. 셋째, 기존사업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수행단위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저해하고 지역문화정책 집행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섯째, 문화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역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책적 과제

문화정책전문가들조차 문화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기조가 경제부흥과 동등하게 언급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지만,¹¹⁾ 이제 냉정하게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 다시 기초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¹²⁾

9)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62~1163의 논문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10)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문화산업과 문화사회화의 급속한 진전이 국내 부처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1)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문화산업과 문화사회화의 급속한 진전이 국내 부처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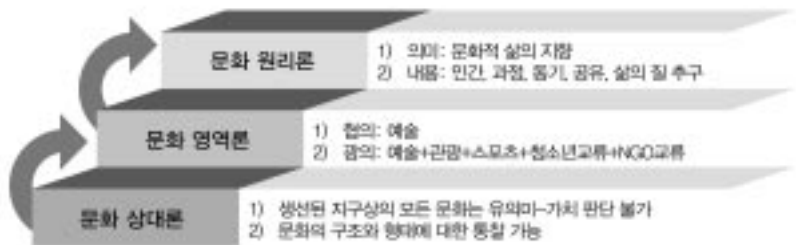
12) 정정숙, 2013, 「문화예술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문화융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3.

1.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표 2〉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

구 분	다문화	문화교류	관광	문화예술교육	도서관·출판	국어	디자인 공간·문화	일자리
고용노동부	■							■
교육부	■			■	■	■		
국방부		■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보건복지부	■			■	■			
법무부	■		■			■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행정부	■		■		■			
외교부		■						
여성가족부	■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그림 3〉 문화론의 세 가지 차원



자료 : 정정숙, 2013, 「문화예술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문화융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p114

둘째, 현재 문화정책의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실천과제들이 모색되어야 한다¹³⁾. 문화정책의 쟁점사항들로는 ①현재의 문화정책 체계는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고 있는가? ②문화정책이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③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영역 간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④문화정책 협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이며, 이를 위한 문화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과 실천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3)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64~1168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특집 문화융성의 시대, 충남의 미래는?

〈표 3〉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실천과제(예)

키워드	주요 정책 과제	해결과제
문화역능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역량 강화	▶ 규제 최소화, 육성지원정책 강화 ▶ 창조적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예술가들의 사회진출의 확대	▶ 예술가 직업 다원화 쿼터제 ▶ 예술가의 정규직 직업기회 제공
	창의적 예술교육의 활성화	▶ 창조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예술-기술 융합 콘텐츠 R&D 강화 C-A-T R&D	▶ 새로운 혁신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 재원의 강화
	융합적 문화창작 콤플렉스 조성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문화창작 복합Complex로 조성
	C-A-T 특성과 창조인력 양성	▶ 국제적 인력양성을 위한 미래창조 스튜디오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제정	▶ 국회 입법 활동/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준수/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 확대
	소수문화의 공존과 상생	▶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문화독점 해소와 비주류문화의 활성화	▶ 문화콘텐츠 독점 규제와 비주류문화 유통시장의 다양한 확대
	한류의 지속가능한 확산	▶ 대중문화 산업 지원 방안마련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	▶ 전통문화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지원
문화분권	비주류 문화권의 문화교류 확대	▶ 비주류 문화권역 전문가 양성 ▶ 비주류 문화권과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국회 입법 활동/지역분권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
	권역의 문화특성화 전략	▶ 서울,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역 별로 문화 장기발전 MP
	지역문화 자원과 문화관광 연계	▶ 지역문화 자원의 스토리텔링개발과 문화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연구
문화권리	지역 맞춤형 문화재정 확보	▶ 문화재정 2%에 걸맞는 지역문화재정 지원 및 운영
	문화기본법 제정	▶ 국회 입법활동,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근본 가치 제정
	표현의 자유 확대	▶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행복지수 향상	▶ 지역문화행복지수 개발 및 지도만들기
문화자립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 확대	▶ 공연관람, 축제참여, 미디어 활동의 접근 기회를 확대
	예술인복지법 전면 개정	▶ 국회 입법 활동/4대보험과 예술가 실업급여의 실현
	복합 문화커뮤니티 센터 걸림	▶ 전국 문화예술,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건립
	문화협동조합 활성화	▶ 문화예술계의 문화협동조합 운영 지원
	문화예술 치유 프로젝트	▶ 문화예술 치유 지원센터 및 스쿨 건립 및 운영

자료 : 이동연, 2013, '문화융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의 구상', 이무웅, 2013,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서 지역문화 융성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참고문헌

- 양건열, 2013, '문화융성의 의미-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사례 중심으로', 『가치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학순 · 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50~1178.
- 정정숙, 2013, 「문화예술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문화융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4.
- 정홍익, 2013,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토론을 위한 준거틀-」,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475~5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1차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융성 확대와 국민행복」,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2차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지역문화 격차해소와 역량강화」,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의 국제기여와 경쟁력 강화」,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4차 자료집.

충남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양현미 |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들어가며

새 정부 출범으로 충남의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정부나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문화가 실제로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문화에 대한 정부투자 규모는 2000년도에 비로소 정부 예산의 1%가 되었고 그 후 10년이 넘었지만 문화예산은 1% 초반에 머물고 있다.¹⁾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산 2%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창조경제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문화 현장에서는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모든 지자체에 고르게 돌아가게 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충남의 문화재정 구조를 감안할 때, 충남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위험이 있다.

충남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충남 유교문화원 설립, 내포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대응이 눈에 띈다. 하지만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다행히 충남에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조만간 착수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동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점에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향후 이루어지게 될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충남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의 정부 시기 문화예산은 문화와 관광예산을 합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도 문화예산이 1.4%라고 한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관광분야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예산 2%는 문화체육관광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새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문화를 국정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조성 4가지인데 이중에서 문화융성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라는 3대 전략 하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문화유산이나 문화산업에 비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과제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시대적 과제인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림 1〉 문화융성 관련 국정과제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는 문화융성을 위한 과제 개발과 실현을 위해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하였다. 9월에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문화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위촉하였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문화 영역별 토론회와 함께 전국 9대 권역에서 지역문화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상향식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의견수렴에 근거하여 정부는 지난 7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문화의 달인 10월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3년도 업무계획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크게 다섯 가지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문화복지 정책의 중심이 소외계층에서 중산서민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대두된 정책영역이 생활문화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보급으로 대표되는 문화복지 정책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모두가 문화를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생활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배우고 아마추어로서 창작활동을 하며 문화동아리를 통해 함께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문화시설로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동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과 같은 전문문화시설의 보급은 시군 단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문화를 생활화하기에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생활문화정책은 문화생태계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 왔던 공급과잉의 문제, 즉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보다 문화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행복을 높임과 동시에 문화 자체의 발전과 문화계 일자리의 확대와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정책이 문화향유를 대표하는 정책이라면, 문화공급과 관련한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는 문화재정 지출구조와 전달체계의 효율화이다. 문화부의 경우, 하고 싶은 정책은 많은데 예산이 적다보니 자잘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로 이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화재정 전달체계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1,600여개에 이르는 지원사업을 1,000개 이하로 줄이는 재정재출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광역문화재단으로 문화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사업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광역문화재단으로 전달되는 문화재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재생 등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이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고지원사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경우 광역문화재단은 더이상 문예진흥기금의 분배통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나 기초문화재단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에서 광역 단위의 종합적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이 변화될 전망이다.

셋째,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인문 정신문화정책이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대두하고 있다. 인문 정신문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나는 인문학을 문화정책 차원에서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문학 관계자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별도로 가질 정도로 정책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을 포함한 기존의 문화시설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요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정신문화를 진작하는 것이다. 문화부와 문화재청으로 분리되어 있던 정신문화영역이 한민족 문화이카 이브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통합관리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활용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넷째, 문화유산정책에서는 문화유산의 분야별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며, 새롭게 전통문화산업정책이 부각될 전망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책영역은 문화부와 문화재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해온 한스타일 사업, 문화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분산되어 각기 추진되던 전통문화산업정책이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섯째,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은 새 정부가 경제부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추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6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제시된 창조적 생태계 조성, 창의인재 양성 등 6대 전략은 문화콘텐츠산업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현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창조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 지난 7월 발표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따르면, 창작과 창업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융자의 확대가 대표적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계획은 지역 기반이 취약한 미디어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으로 제시된 한국형 디지털 테마파크(가칭) 조성 추진,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은 다소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어 향후 정책동향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융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산 2%를 확보하고자 한다. 문화기본법은 참여정부 시기에 제기되었던 것이나 사회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성격이 강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어 제정되지 못했었다. 새 정부에서 문화기본법은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제가 아니라 평가 및 컨설팅 성격으로 완화하여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문화영역에서는 관광이나 체육분야와 달리 정부가 법정 계획을 세워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 5년 단위로 정부 문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수립범위는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관광, 여가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역의 문화발전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산 2%의 경우에는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서 의지는 있으나 실현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이지만 타부처 문화 관련 예산을 합쳐서 문화예산 2%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 문화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새 정부의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와 관련 계획들은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진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재정 전달체계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예산은 1,421억원으로 도예산의 3.10%이며 이중 국비 비중은 42.1%이다.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만 합한 문화예산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32%에

불과하다. 문화예산의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57%, 문화예술 32%, 문화산업 11%로 문화유산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충남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전통문화는 강하지만 현대예술과 대중문화는 상대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문화예산이 5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은 부족한 충남의 문화예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도비를 매칭하는 규모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매칭을 위한 도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비 매칭에 대부분의 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자체 기획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지역자율사업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방향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지역간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도 자체사업의 비중을 갑자기 줄일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의 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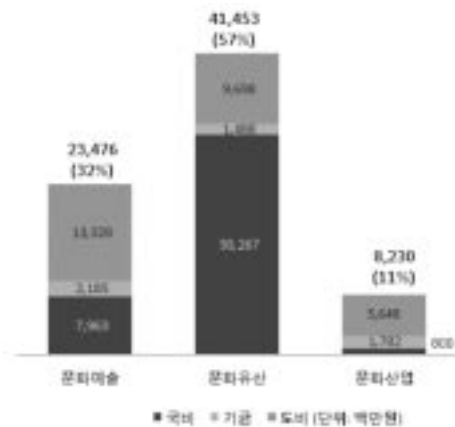
문화재정 전달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충남문화재단이다. 현재 충남은 문화재단 설치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광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광역문화재단은 문예진흥기금의 분배창구에서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의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처럼 규

모도 크고 역사가 오래된 광역문화재단들도 국고 매칭사업이 2009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업무량의 폭증,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운영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아직 효율적인 문화행정시스템과 숙련된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충남문화재단에게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충남의 문화예술을 창작, 유통, 향유라는 문화가치사슬체계에서 분석해 보면, 유통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보급은 전국 6위이지만, 문화예술의 공급과 향유 측면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에 해당하는 전시와 공연 건수 측

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작가의 미술전시와 공연이 전국 15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²⁾ 도내 창작인력과 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예체능 계열 대학생 수가 약 3만7천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림 2〉 2013년도 도 문화예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2012 문예연감.

3) 충남발전연구원(2011), 충남 산학협력 실태분석과 혁신방안 연구.

나타나고 있으나⁴⁾, 이러한 인력은 대부분 지역과 무관하며 졸업 후 대부분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창작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수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고 운영여건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문화시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드웨어 면에서는 전국 6위로 상위권이지만, 문화시설의 운영수준과 도민의 이용률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충남의 서남부와 동북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의 공급과 유통이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 도민의 문화향유 수준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충남은 도농간 격차가 크고 통상 정부 문화정책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하는 농어촌 주민이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도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이곳 주민도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충남 도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감안할 때, 정부의 문화복지 및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연 농어촌에서, 정주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생활문화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충남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모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충남의 문화현실에 대한 솔직한 성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문화시설 운영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서 생활권 문화환경의 조성까지 문화가 흐를 수 있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남은 문화유산정책에서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도민의 인지도와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대상 선정, [돈암서원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등 가시적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백제문화유산에 비하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충남 유교문화 사업, 내포문화권 개발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충남 유교문화권 사업은 문화유산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문 정신문화정책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를 인문학 진흥 및 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문화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충남의 문화산업은 2012년 매출액 4,922억 원으로 전국의 0.7%를 차지하고 있다.⁵⁾ 충남의 문화산업은 가치사슬체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획제작 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 62.9%, 자본금 1억 미만인 43.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실정이다.⁶⁾ 충남은 2013년 기준 문화산업정책 예산이 총 82억 원이지만 이중 78%가 지역축제 예산으로 실제 문화산업에 쓰이는 예산은 22%에 불과하며 이 예산도 대부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충남은 게임, 영화, 음악 등 특정 미디어 중심으로 지역문화산업을

4)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콘텐츠산업통계.

5) 충남문화산업진흥원(2011), 2011 충남 문화산업 기반조사.

특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충남이 전통문화산업과 농어촌 문화콘텐츠산업처럼 문화산업을 타 산업과 융합하는 분야로 특성화하고, 가시사슬체계 면에서는 예체능대학이 많으므로 창의인재 양성으로 특성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충남이 전통문화산업과 융합산업으로서 농어촌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창의인재 양성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획제작의 초기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한다면, 현재 문화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창의인재 양성과 창작과 창업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융복합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충남이 문화산업진흥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로서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각 분야별로 해당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충남에서 문화와 과학기술, 문화와 ICT를 접목한 프로젝트를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가며

충남의 문화정책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화두는 충남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충남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아직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 중에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충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재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3과 체제로 정비하였고 산하에 내년 초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3과 체제에 대응하는 문화거버넌스 체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거버넌스의 체계화를 계기로 충남의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기대해 본다.

행복한 충남,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략의 방향

전성환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들어가며

누구나 지금의 세계와 한국상황을 위기적 상황이자 전환의 시대로 진단한다.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 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지칭하는 “무연(無緣)사회”¹⁾, ‘스마트폰에 집착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게 아니라 사이버네트워크에 집착하는 사회를 일컫는 “자폐사회”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병리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혼율(인구천명당)은 70년대 0.4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OECD국가중 7위, 자살율(인구 10만명당)은 85년 9.3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OECD국가중 1위, 국민행복지수(갤럽조사)는 2012년 기준 148개국중에서 97위, 사회갈등지수는 OECD국가중 4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시스템, 정당이나 학교 등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기제들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해법은 잘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해법은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 위기의 현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슬로건하에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4대 국정지표(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하였고, 문화융성 국정지표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국정지표 수행의 골격을 갖추었다.

문화융성은 문화적 가치가 모든 부문에서 기본원리로 작동되는 사회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와 함께 어느새 전국 방방곡곡의 정책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문화융성’의 개념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이 어느 토론회에서 ‘문화적 가치가 모든 부문

1) 2010년 일본 NHK방송 특집에서 언급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에서 기본 작동원리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화 융성이다 이라고 밝힌 표현에 잘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복지’ 화두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방향이 된 것처럼 ‘문화’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MF체제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시절,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확대필요성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이념논쟁으로 흘렀고, 복지가 사회불평등해소, 소득재분배효과, 국민행복추구권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제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경제 우위의 관점에서 복지를 다루어온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건 ‘문화융성’은 ‘문화’ 본래의 가치와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자 새로운 경제부흥의 전인차로서 ‘문화’를 얘기하면서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것이 ‘복지’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싸이’로 대별되는 한류의 글로벌화일 것이다. 작년에 프랑스 파리대학교 정치학연구소 교수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기 소르망이 한국에서의 한 강연에서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뿐’이라고 하면서 한국문화의 글로벌 문화브랜드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지난해 영화·음악 등을 포함하는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8550만달러 흑자를 냈다고 한다. 관광객은 1,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력 신장에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상징되는 한류가 가세한 결과다. 1999년 시작된 한류는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시작으로 ‘대장금’, ‘겨울연가’로 일본 및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갔고, 거기에 가세해 아이돌 스타가수들의 K-POP이 동남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진출해 한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방안”(2012)에 따르면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하면 휴대전화, 가전제품, 식음료 등의 수출이 평균 412달러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한류를 비롯한 문화콘텐츠가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방증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던 다양한 상품군의 상점가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국내화장품 체인점 홍보경연장으로 거리경관을 바꾼 것은 한류스타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화장품 회사들의 제품의 질 향상노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화장품 회사 스스로 해외마케팅과 홍보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한류의 간접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흥미로운 논거를 제시하는 사례는 심리학자인 광금주 서울대 교수가 한 신문사의 기고에서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롭고 희소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다. 최신 문화예술 트렌드는 가장 새롭고 좋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뉴런을 만족시킨다”, “경제가 어렵고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더욱 만족스럽고, 즐거운 자극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경

제불황시기에도 창조능력에 기반한 문화예술산업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창조경제보고서(2010)〉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무역이 12%이상 줄어들었지만 그림, 공예, 책, 공연예술, 디자인 등 창조산업분야는 활발하게 성장해서 매년 평균 5.5% 이상 성장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2조 2000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플라이스위터하우스쿠퍼스(PWC)’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세계시장규모가 1조 6385억불(전년대비 5.1%성장)로 향후 5년간 5.6%의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규모(세계시장점유율 2.7%)이며 2012년 콘텐츠수출액은 48억불로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고 한다.³⁾

이제 한국사회도 끝모를 저성장체계에 돌입한 듯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중심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류의 힘에서 보듯 문화예술산업은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여타 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화와 실물산업과의 결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지표로 ‘문화융성’을 내건 것은 옳은 방향이라 하겠다.

국민통합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문화융성

새 정부가 제시하는 ‘문화융성’의 방향은 대략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사회통합과 갈등 치유,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어르신 문화활동지원, 문화바우처 발행,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집중투자하겠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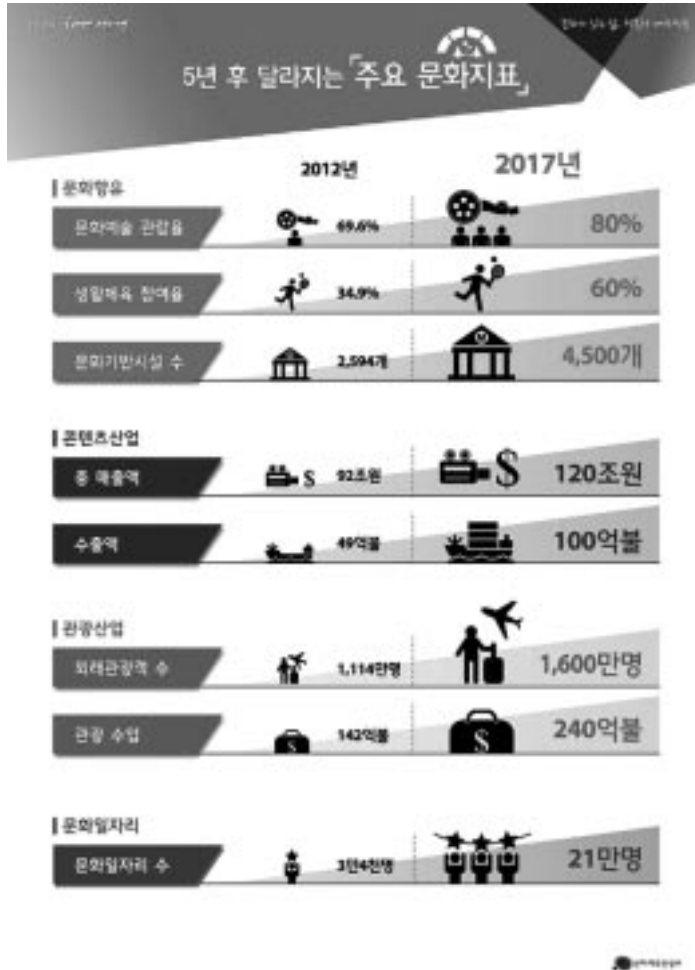
둘째, 창작뮤지컬, 공연예술 등 창작지원과 공연예술활용 관광사업화 등 창의적 콘텐츠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문화 기본권의 보장과 문화진흥을 위해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2017년까지 문화 재정지출을 2%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문화융성’ 과제의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서 밝힌 5년 후 달라지는 [주요문화지표]는 실로 야심차다.

3)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반도체시장규모를 작년보다 3.2% 축소된 2,899억달러로 전망했다. 2013년 세계가전시장 규모는 2,500 억달러 정도로 예상한다.(삼성측 발표)

3. 행복한 충남,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략의 방향



하지만 중앙정부차원의 문화융성에 대한 목표지표들이 지역문화의 수준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충남도민들에게 체감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문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주류분야인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산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류는 여전히 TV속 연예가소식에서 들을 수 있는 먼 곳의 얘기일 뿐이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첨단 문화기술과 장비와 연출력, 인기배우들로 호평받는 수준 높은 뮤지컬을 보는 것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공연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없어 불가능하거나 시장성이 없어 아예 불가능하고, 지역 장소마케팅으로서의 의미는 가질지 모르나 지역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는 거의 기여가 없는 지역축제들에 B급 대중가수들을 보는 것에 만족해한다.

그나마 중소도시규모에 하나씩 있는

영화관을 즐겨찾는게 일반 지역민들의 평균적 문화생활인 것인 만큼 작년 누적관객 1억명을 돌파하고 올해는 2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청계천 개장 첫해에 1억명이 찾아왔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서울시 홍보가 서울에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광장과 공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인 것처럼, 한국영화의 호황이 마냥 반갑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중소영화제작사와 영화인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대기업 배급사와 투자자들만 살찌는 구조가 안타깝기도 하고 값싸고, 수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빈곤한 결과인듯 보이기 때문이라.

지역문화융성의 성패는 사회적자본과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창조인력 양성에 달려있어

현재 수준의 지역문화는 수도권의 해비급 체급에 맞춰 체형을 불리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문화융성의 성패는 사회적 자본과 시민사회 형성을 강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창조적 인력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투자’ 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를 통합·유지·인간관계, 책임의식에 비롯되는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들, 상호부조, 사회적 연대, 공동체화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의 구축은 ‘시민사회’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때는 자발적, 수평적, 공식적, 이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조직을 말하는데 스포츠클럽, 문학동아리, 연극동아리, 교회모임 등과 같은 조직을 말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예로서는 정당,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

이런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지역문화융성은 창조인력들이 활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공간(레지던스, 아틀리에, 예술공방 등)들을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기존 장르별 문화예술인단체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중심에서 문화예술창작활동가, 문화예술산업기획자 중심의 지원활동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는 결국 전업문화기획자, 전업문화예술인의 인력 양성 없이 지역문화의 뿌리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충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관점에서도 건설, 항만, 교통분야 중심에서 문화, 체육분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하고, 충남도내에서 활용가능한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근린공원 등의 공공부분 공간과 대학, 학교도서관 및 체육관, 교회 등 다양한 민간영역의 공간들과의 ‘문화적 연결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경제대공황의 시기에 노동진흥국(WPA)을 중심으로 다리, 공원 등 수천 개의 지역개발사업과 9천개 이상의 오락시설을 지원하면서 작가, 미술가, 교사, 배우, 음악가, 지역언론 등을 육성하는 정책을 폈고, 체육 분야에서도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254개의 골프장, 318개의 스키장, 805개의 수영장, 1,720개의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만들었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종합적인 체육시설 건립계획인 골든플랜을 수립하여 1975년까지 15년 동안 경기장 14,700개, 체육관 15,900개,

4) 하버드대 교수인 푸트넘(Robert D. Putnam)은 ‘사회적자본과 민주주의’(2000)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스포츠클럽이 노동조합, 정당, 교회조직들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5) 이응식(2008) ‘생활체육 정책의 현재 모습’ - 관주도 정책관점에서 - 논문중 6page 인용

실내수영장 3,000개, 어린이운동장 31,000개를 건립하여 경기부양을 하였다.⁵⁾ 프랑스는 1950년대말 A. 말로가 문화부장관인 시절부터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이 파리시장이었을 때 파리시의 경우 각 20개의 구에 콩세르바투와르(Conservatoire : 시립예술교육기관), 도서관, 아뜰리에 등을 통해서 동네들 총괄하는 일종의 문화적 연결망을 건설하면서 문화앞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지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지역차원에서는 문화공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효율성 높은 시설을 새로 짓거나, 여러 공적, 사적 공간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펴야 한다. 이는 기압계는 빈공장이나 농촌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시민들이 자체운영하는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나 요코하마의 부두시설을 활용하여 작가 레지던시, 카페, 문화도서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요코하마 창조도시의 핵심거점으로 활용되는 BankpArt 사례, 전철하부공간과 집창촌지역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요코하마 코가네초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볼 일이다. 또한 파리, 비엔나 등 오래된 문화도시들에 있는 교회당처럼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있는 훌륭한 종교시설들을 활용해 프로그램과 일부 장비지원을 통하여 클래식음악회,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문화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평생교육분야,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현행 단체위탁방식의 강사풀에 의존하는 것을 폐지하고, 독립된 창조인력들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단순강좌를 줄이고 마을만들기, 자생적마을축제, 다문화프로그램 등 시민주체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적 실천 프로그램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공예, 디자인, 관광, 스마트앱, 영상미디어 등 문화산업분야들의 콘텐츠 발굴과 제작에 적극 지원하면서 이들 창조인력들이 수도권 창조인력, 국제적 창조인력들과의 네트워크, 융합과제 수행을 위해 전시기원, 국제 레지던시 및 교환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지역내에 25개 대학 100여개 과 10,000여명의 학생들이 문화예술산업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들과 마을과의 협력 연계프로젝트 발굴, 나아가 마을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 모델링화 사업 등은 매우 긴요해 보인다.

유휴 간척지의 갯벌복원에 관한 메커니즘¹⁾

김종화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머리말

최근 갯벌 등의 연안습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유휴 간척지에 대한 갯벌복원의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에 의하면 갯벌 등의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1ha당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100배 이상 높이 평가되고 있다(정명생 외, 2011).

갯벌은 조류나 강에 의해 진흙이 쌓인 해안습지로 어류, 패류, 조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홍수조절, 태풍피해 예방, 관광자원 제공 등의 다원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뛰어나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미국 조지아 주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정명생 외, 2011).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 갯벌이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갯벌은 급속한 경제·산업화시대를 겪으면서 보전·이용되기보다는 간척사업에 의한 육지화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부 간척지에서는 본래 취지

였던 농업용지, 산업용지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간척사업에 의해 조성된 담수호에서는 수질오염, 악취 등의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산업 용지로 이용되지 않는 유휴 간척지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갯벌과 갯벌복원의 연구는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흥동 외(1996)는 갯벌의 기능으로 수산물 생산기능, 서식지 기능, 정화기능, 심미적 기능이라고 했으며,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균 21,746\$/acre이라고 하였다. 최성길(1999)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고찰하고, 주민의 삶을 보전하는 갯벌의 이용방법으로 생태관광, '펄'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전철현 외(2002)는 전국을 서부지역(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동부지역(강원, 경북, 울산, 광주, 대전, 충북)으로 나누어 새만금 갯벌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으며, 갯벌이 분포하고 있는 서부지역은 매년 가구당 약 29,500원, 갯벌이 분포하고 있지 않는 동부지역은

1) 본 논문은 충남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매년 가구당 약 17,950원으로 추정하였다. 또 최미희(2004)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4,994백만원/ha, 수질정화편익은 9,757백만원/ha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태적 기능을 언급하고, 비시장재인 갯벌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보다 갯벌이 많이 줄어들었고 유휴 간척지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복원으로 국가의 환경·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실효성이 떨어지는 유휴 간척지에 대하여 갯벌복원의 당위적 메커니즘을 검토해 보고, 갯벌복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생태·경제적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갯벌 및 간척사업의 현황

갯벌이란 조류로 운반되어 온 미세한 흙들이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²⁾ 밀물 시에는 바닷물에 의해 드러나지 않지만 썰물 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공간으로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의미한다(고철환, 2001). 우리나라 갯벌은 국토의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조석간만의 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분포면적이 적어진다(전철현, 2001). 특히, 서해안 지역의 대부분은 개방형 갯벌로 연안사주(沿岸砂州)가 없는 조건에서 조류와 파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모래갯벌이 우세하게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정명생 외, 2011). 우리나라의 갯벌은 248,940ha로 주로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남, 경기(인천), 충남, 전북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1〉 전국 및 시·도 갯벌면적

(단위: 면적 ha, 비율 %)

시 도	1987년		1998년		2003년		2008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320,360	100.0	239,800	100.0	255,020	100.0	248,940	100.0
경기(인천)	117,960	36.8	83,850	35.0	91,490	35.9	87,270	35.1
충남	43,420	13.6	30,420	12.7	36,730	14.4	35,880	14.4
전북	32,160	10.0	11,360	4.7	13,200	5.2	11,770	4.7
전남	117,910	36.8	105,410	44.0	101,740	39.9	103,690	41.7
경남(부산)	8,910	2.8	8,260	3.5	11,860	4.7	10,330	4.2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stat.mltm.go.kr/portal/main/portaMain.do>」 "연안습지면적현황" 2013.3.28 검색

2) 해양수산부, 갯벌정보시스템 「<http://www.ecosea.go.kr>」, 갯벌이란, 2013.4.1 검색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는 크게 해면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갯벌 관련 해면어업의 주종은 마을어업으로 주로 바지락, 백합, 가무락, 꼬막, 개랑조개, 동죽, 맛, 굴(바닥식) 등의 패류와 낙지, 해삼, 망둥어, 주꾸미 등이 생산되고

있다(정명생 외, 2011). 갯벌 관련 주된 어업형태인 마을어업은 전국적으로 <그림1>과 같이 1994년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04년 최저점이 되었고, 그 후 차츰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다시 감소세에 있다.³⁾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그림 1> 전국 마을어업의 생산금액 및 생산량 추이

한편, 간척이란 바다나 호수를 막아 물을 빼어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토지를 간척지라고 한다(유영성 외, 2007). 우리나라는 간척사업(1946년~2011년)을 통하여 총 231,624ha의 국토를 확장하였으며, 총 9조 1,612억원의 사업비

를 소요하였다. 이는 대단위 간척사업 95,881ha(41.4%), 서남해안 간척사업 85,823ha(37.06%), 민간 간척사업 49,920ha(21.54%)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담수호와 인공습지를 제외한 간척면적은 155,852ha이며, 대단

3) 생산량: 1994년 102,395톤, 2004년 20,638톤, 2009년 33,859톤

위 간척사업 55,707ha(35.75%), 서남해안 간척사업 59,956ha(38.47%), 민간 간척사업 40,189ha(25.78%)로 되어있다(유영성 외, 2007).

간척사업은 농경지 확보, 산업용지 또는 경제단지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환경 생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특히, 갯벌에서의 간척은 염생식물, 저서동물, 패류의 생산기능과 철새의 서식·생육·번식장소가 손실되고, 그로 인한 생물학적 먹이사슬과 물질 순환기능이 단절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갯벌복원의 메커니즘

갯벌복원의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게임이론의 전개형게임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제시한다. 전개형게임은 경기자(player), 선택의 순서, 정보의 종류, 행동과 전략, 결과 및 보수를 모두 명한 게임나무(game tree)를 통하여 전개되는 게임을 말한다. 게임나무는 마디(node)와 가지(branch)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결정마디(decision node)와 종결마디(terminal node)로 분류된다. 의사결정마디는 경기자 중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곳이며, 종결마디는 게임의 최종결과가 실현되어 모든 경기자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불되는 곳이다. 게임이 최초로 시작되는 곳을 뿌리(initial node)라 하며, 의사결정마디의 하나이다(김영세, 2008).

전개형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제시되어 한다. 먼저, 정보가 불완전정보이며, 불완비정보, 완비정보라는 것을 가정한다. 불완전정보는 각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불완비정보는 각 경기자가 상대방 경쟁자의 특성 혹은 유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완비정보는 경쟁자의 특성 혹은 유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김영세, 2008).

본 게임의 경기자로서 갯벌과 정책결정자를 경기자로 설정한다. 갯벌과 정책결정자는 각각 서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므로 불완전 정보가 된다. 또 갯벌은 정책결정자에 대한 특성을 알지 못하므로 불완비정보가 되나, 정책결정자는 갯벌의 특성을 각종 조사와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완비정보라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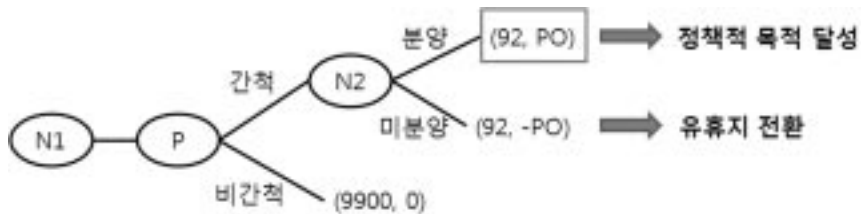
모델 설정의 편리성을 위하여, 간척의 목적은 농경지 확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본 게임에서 갯벌의 가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1ha 9,900달러이고, 농경지의 가치는 92달러라고 가정한다. 이 게임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갯벌에서 간척되어 농경지까지의 전개, 2단계는 농경지에서 갯벌복원까지의 전개이다. 게임의 편의를 위해 각 경기자 및 보수, 비용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에서 보듯이 1단계 게임은 매우 단순하다. 갯벌 상태인 N1에 대해 정책결정자 P가 간척과 비간척을 선택한다. 먼저, 간척을 선택할 경우 N1은 농경지로 바뀌고, 이 농경지를 N2로 지칭한다. 그리고 N2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으로 분양과 미분양이라는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표 2〉 게임의 설정

- 경기자
 - N1: 갯벌, N2: 농경지
 - P: 정책결정자
- 보수 및 비용
 - 갯벌의 가치: 9900, 농경지의 가치: 92
 - PO: 정책적 성과, NPO: 갯벌복원에 따른 정책적 성과
 - RC: 갯벌복원의 공사비용, 농업인 보상금, 대상 간척지 매입금
 - SC: 사회적 비용(주민합의 유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드는 비용)
 - SEV: 사회 경제적 가치
 - AC: 농경지 관리비용, AOC: 농경지관리의 기회비용,
 - EC: 환경개선비용, EOC: 환경개선의 기회비용, SEC: 2차 환경피해비용

〈제1단계 게임: 갯벌에서 농경지까지〉



〈그림 2〉 1단계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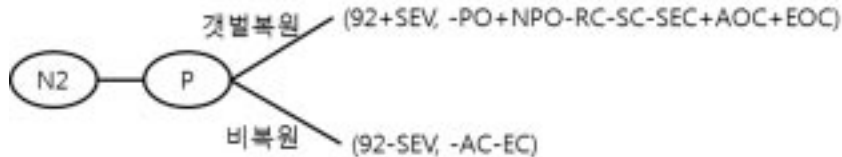
만약 식량증산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N2는 농업인에게 전부 분양되며, 이는 곧 정책결정자 P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됨을 의미한

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식량증산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이는 유휴지로 전환되고 정책결정자 P는 정책적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⁴⁾

4) 이를 마이너스로 표현함

〈제2단계 게임: 농경지에서 갯벌복원까지〉

2단계 게임은 〈그림3〉에서 보듯이 1단계 게임에서 미분양된 유휴 간척지(농경지)에서 시작한다.



〈그림 3〉 2단계 게임

2단계 게임에서는 간척된 농경지에 대하여 정책 결정자 P가 복원과 비복원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갯벌복원을 보면, 복원에 따른 갯벌의 보수는 기존 농경지에서 갯벌로 전환되면서 농경지 가치에,

갯벌복원에 따른 사회 경제적 가치가 더해져 92+SEV가 된다. 그리고 갯벌은 복원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복됨을 감안하면, 최대 9,900달러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92+a(SEV) \leq 9,900 \text{ ----- ①}^5$$

다음으로 정책결정자 P의 보수를 보면, 1단계 농경지 미분양에 따른 정책목적 미달성에 대한 보수 PQ, 그리고 갯벌복원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적 달성 NPO, 복원을 위한 공사 및 농업인 보상, 토지 매입 등을 위한 복원비용 RC, 갯벌복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SC, 복원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의 피

해비용 SEC, 농경지관리의 기회비용 AOC, 환경개선의 기회비용 EOC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단계 게임에서의 PO와 갯벌 복원에 의한 NPO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OC+EOC-(RC+SC+SEC) \text{ ----- ②}$$

②의 식에서는 농경지관리와 환경개선의 기회비용 AOC+EOC가 갯벌복원비용, 사회적 비용, 2차 환경오염의 피해비용 RC+SC+SEC보다 높을 경우, 정책결정자는 플러스의 보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AOC+EOC의 기회비용이

RC+SC+SEC보다 클 수 있으므로, 플러스의 보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갯벌복원 직후는 ②식에서 농경지의 가치 92를 뺀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5) 갯벌의 사회 경제적 가치(SEV)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갯벌 자연복원상태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커지게 됨. 이에 따라 갯벌 자연복원상태를 나타내는 a를 곱함.

$$\{AOC+EOC-(RC+SC+SEC)\}-92 \text{ ----- ③}^6$$

그러나 갯벌복원의 목적이 국가의 단기적 이익 창출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함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갯벌의 자연복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a(SEV)$ 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시간이 경과한 일정시점(2시점)에서 $92+a(SEV)$ 가 갯벌복원비용 $\sum_{t=1}^2 (AOC+EOC)_t - r(RC+SC+SEC)$ 와 같게 되고 내쉬균형이 성립하게 된다(그림4 참조).⁷⁾

$$92+a(SEV) = \sum_{t=1}^2 (AOC+EOC)_t - r(RC+SC+SEC) \text{ ----- ④}^8$$

그리고 갯벌 복원에 따른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92+a(SEV)$ 가 9,900을 달성하는 3시점(완전복원상태)까지 $9,900=92+a(SEV)$ 가 복

원비용보다 점점 커지게 되며, 그 이후에는 일정한 “이익”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9,900 = 92+a(SEV) > \sum_{t=1}^3 (AOC+EOC)_t - r(RC+SC+SEC) \text{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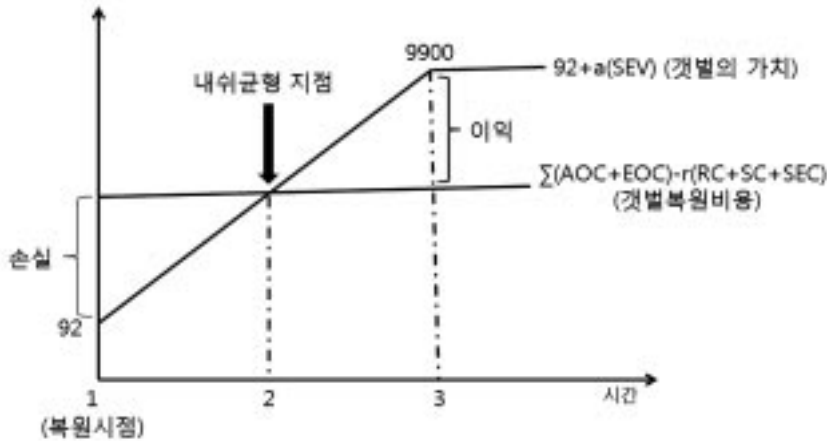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공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자 P (또는 국가)는 갯벌이 완전복원된 상태(3시점)에서 다

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특별한 인위적 훼손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⁹⁾

$$9,900 - \left\{ \sum_{t=1}^3 (AOC+EOC)_t - r(RC+SC+SEC) \right\} \text{ ----- ⑥}$$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4>와 같다.

- 6) (AOC+EOC)는 간척된 유류 농경지의 관리비용과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므로, 갯벌 복원공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관리비용과 환경개선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기회비용이 발생함으로 이를 복원비용의 일부로 포함시킴.
- 7) 내쉬균형이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경기자도 이탈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 상태 혹은 전략조합
- 8) (AOC+EO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경지 관리비용과 환경개선비용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도 시간이 경과할 수록 누적됨. 따라서 시간경과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를 (AOC+EOC)로 표현함. 한편, 갯벌은 일단 복원하면 그대로 방치해도 자연적으로 복원됨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시간에 따른 이자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비용에 r 을 곱함.
- 9) 여기서의 “특별한 인위적 훼손”이란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이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 해당됨



주1 : 위의 그래프에서 갯벌복원비용은 누적치를 나타냄.

주2 : 본 모델에서 갯벌의 최대가치를 9900달러로 설정하였으므로, 갯벌의 가치는 9900에서 일정하게 됨.

주3 : (AOC+EO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고, (RC+SC+SE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 또는 물가상승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됨. 따라서 (AOC+EOC)의 누적분이 (RC+SC+SEC)의 가치상승분을 상쇄한다고 가정하고, 직선으로 표현함.

주4 : 가로선에서 1,2,3은 시점을 나타냄.

〈그림4〉 시간경과에 따른 갯벌의 가치

〈그림4〉과 같이, 갯벌복원에 따른 국가의 이익 손실 측면에서 보면, 갯벌복원은 단기적으로 대단 위 토목공사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이익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갯벌복원의 순기능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시점(2시점) 이후(약 5~10년)에는 복원비용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¹⁰⁾ 그리고 갯벌복원에 따른 비용에서 사회적 비용, 2차

환경오염의 피해비용 등을 최소화 한다면 이익을 내는 시점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반면, 간척된 농경지에 대하여 정책결정자 P가 비복원을 선택하게 되면, 농경지의 보수는 92-SEV가 되며, 그 보수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 이는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의 경우 어떤 특별한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가치(지가 등)가 점점 손실되기 때문이다.

$$92-b(SEV) \leq 0 \quad \text{⑦}^{11)}$$

10) 갯벌복원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시점(약 5~10년 이후)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것임.

11) 비복원된 유휴 농경지는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개선노력으로 본래적 가치가 유지되더라도, 농경지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가치(SEV)가 떨어짐. 이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락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b를 곱함.

한편, 정책결정자 P 또한 유휴 농경지에 대한 관리비용과 환경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환경개

선비용이 지불되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구조를 갖게 된다.

$$-(AC+EC) \text{ -----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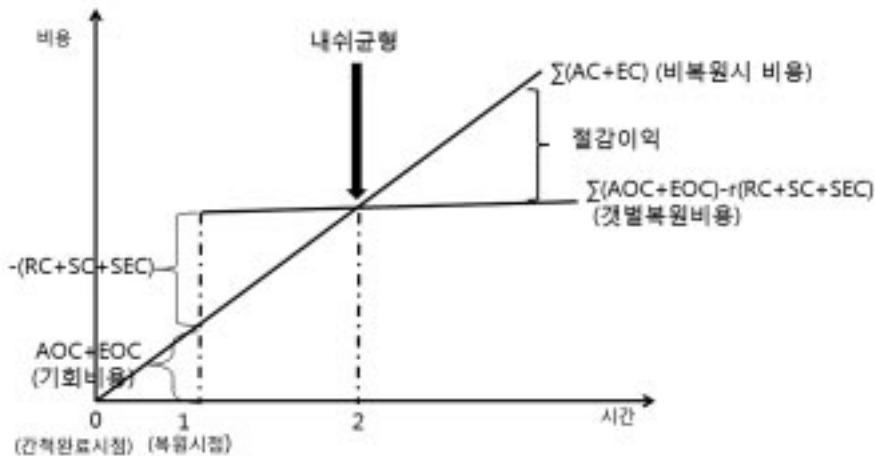
따라서, 유휴 농경지를 갯벌로 복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정책결정자 P는 일정한 비용을 지속적

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 그 유지 관리 비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적된다.

〈갯벌복원 비복원의 비용구조〉

앞서, 갯벌복원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단기의 이익·손실 구조는 비용 문제에서 있어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에 갯벌복원과 비복원 시, 정책결정자 P의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1 : 위의 그래프는 비용의 누적치를 나타냄. 비복원시 비용은 수질악화에 따라 일정금액이상이 투입되고, 그 비용이 누적됨으로 ↑붙임.

주2 : (AOC+EO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고, (RC+SC+SE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 또는 물가상승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됨. 따라서 (AOC+EOC)의 누적분이 (RC+SC+SEC)의 가치상승분을 상쇄한다고 가정하고, 직선으로 표현함.

주3 : 가로선에서 0,1,2는 시점을 나타냄.

〈그림5〉 갯벌복원 및 미복원에 따른 비용 구조

갯벌복원 시와 비복원 시를 비교를 하면, 정책 결정자 P는 갯벌복원 직후에는 갯벌복원에 따른 비용 $\{AOC+EOC-(RC+SC+SEC)\}$ 가 발생한다.¹²⁾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복원과 비복원의 비용이 같아지는 2시점에서는 내쉬균형이 형성되고,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sum_{t=0}^2 (AC+EC)_t = \sum_{t=1}^2 (AOC+EOC)_t - r(RC+SC+SEC) \quad \text{-----} \textcircled{9}$$

복원시점(1시점) 이전에는 갯벌복원과 동시에 $AC+EC$ 가 $AOC+EOC$ 를 상쇄하여, $RC+SC+SEC$ 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복원시점(1시점) 이후에는 $AC+EC$ 가 점점 $AOC+EOC$ 뿐만 아니라 $RC+SC+SEC$ 를 상쇄하게 되고, 2시점에는 $\{AOC+EOC-(RC+SC+SEC)\}$ 전체를 상쇄하게 된다.¹³⁾ 따라서 2시점이후에는, 비복원 시의 농경지

관리비용과 환경개선비용의 누적분이 갯벌복원비용을 추월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됨.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갯벌복원은 농경지 관리비용과 환경개선비용의 누적분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복원비용만큼의 절감이익을 얻을 수 있다.

$$\sum (AC+EC) - \{ \sum (AOC+EOC) - r(RC+SC+SEC) \} \quad \text{-----} \textcircled{10}$$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 P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갯벌복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AC+EC$ 는 매년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 갯벌복원비용 $AOC+EOC-(RC+SC+SEC)$ 는 복원을 시작할 당시에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의 전개형 게임을 통하여 1단계 게임(갯벌 농경지 또는 갯벌), 2단계 게

임(농경지 갯벌 또는 농경지), 그리고 정책결정자 P의 비용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갯벌복원은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손실이고 정책결정자에게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책결정자에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12) 여기서는 갯벌복원을 시작한 시점 또는 직후이므로, $(AOC+EOC)-(RC+SC+SEC)$ 의 상태가 됨.

13) 2시점에서의 내쉬균형은 갯벌복원 이후 뿐만 아니라, 복원 이전의 $(AC+EC)$ 도 포함함.

맺음말

본 연구는 유희 간척지에 대한 갯벌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게임이론을 통하여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담수호 수질오염 등의 해양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갯벌복원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고, 유희 간척지 관리에 대한 비용절감의 대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희 간척지에 대한 갯벌복원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간척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복원된 갯벌이 대부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충분한 수요조사와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유희간척지에 대한 갯벌복원의 논리에서는 갯벌의 가치와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철환,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영세, 게임이론 4판, 박영사, 2008.
- 이흥동 외,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 평가」, 한국해양연구소, 환경부, 1996. 12.
- 유영성 외, 서해안 간척사업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 전철현, 「CVM을 통한 새만금 갯벌의 가치와 행태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12.
- 전철현·신호중·하서현, 「갯벌유무에 따른 가치 부여 행태 분석 : 새만금갯벌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축산경영학회, 2002.
- 정명성 외,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 2011.4.
- 최미희,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 한국습지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습지학회, 2004.
- 최성길, 「충남 서해안의 갯벌 보전」, 지역개발연구논총 제7권 제1호,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9.
-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stat.mltm.go.kr/portal/main/portalMain.do>」 "연안습지면적현황".
- 해양수산부, 갯벌정보시스템 「<http://www.ecosea.go.kr>」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 재정건전화 방향

신혜지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연구원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책임연구원

1. 서론

2008년 2월 인수위에서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의 통폐합을 포함하여 현행 29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쇄고기협상, 강부자 내각 등 각종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면서 공기업 문제는 한발 물러선 개혁 아젠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2008년 7월, 정부는 공기업 개혁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의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민영화의 범위와 공기업 개혁의 주체 등에 대해 술한 논란 끝에 정부는 1차 : 민영화에 초점(2008년 8월 11일), 2차 : 통합·기능조정에 초점(8월 26일), 3차 :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은 필요하지만 선진화 방안이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10월 10일), 4차 : 경영효율화를 통해 10조 원 이상 절감하는데 초점(12월 31일), 5차 : 공공기관 출자사에 대한 지분 매각 등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2009년 1월 15일) 등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

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공기업들의 조직과 규모, 인력의 방만성, 유사·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경역혁신의 지 부족,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등 실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 현실의 한계와 장기간 경기 침체,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정부의 불투명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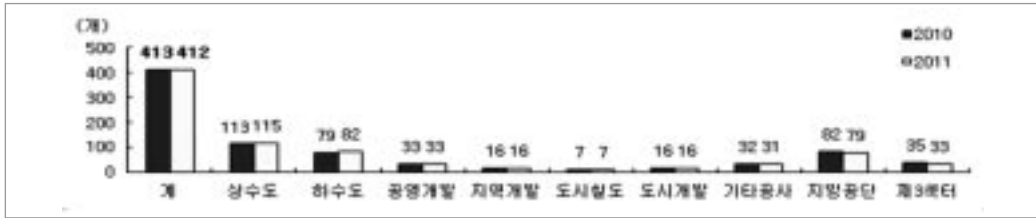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등을 분석한 후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1) 지방공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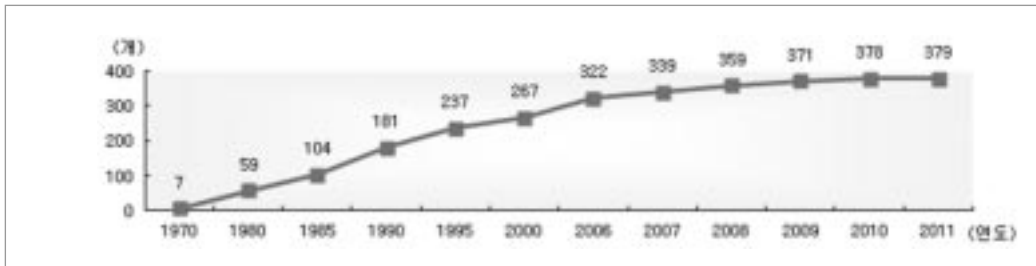
지방공기업은 2011년 말 기준 지방직영기업 246개(상수도 115, 하수도 82, 경영개발 33, 지역개발기금 16),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166개(도시철도 7, 도시개발 16, 기타공사 31, 지방공단 79, 제3섹터 33) 총 412개가 운영중이다.

〈그림 1〉 사업별 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추진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을 통폐합하는 등의 조정을 거쳐 2008년 이후 증가세가 완화되었다. 1970년 이후 지방공기업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에 7개(상수도 6, 도시철도 1)로 시작한 지방공기업은 2011년 12월 기준 379개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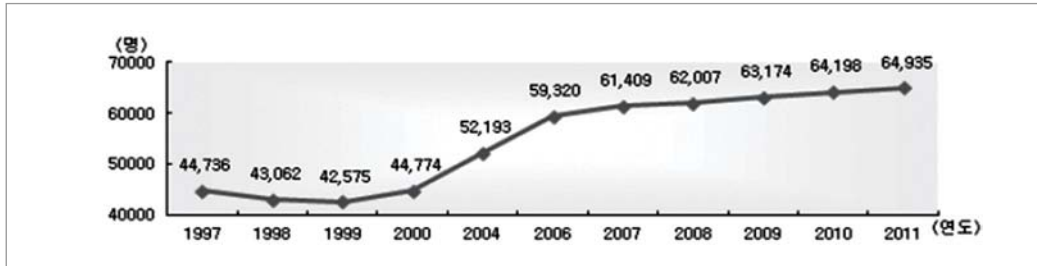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공기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단의 경우,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문화센터, 주차장 등 수요가 증가하였다. 지하철, 지역개발, 공공시설운영 등 주민일상 접점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자본집약적 사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색되었다.

지방공기업 인력규모는 총 64,935명으로 지방직영기업 15,016명(총 인력의 23.1%), 지방공사·공단 49,919명(총 인력의 76.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로는 IMF 이후 인력이 감소하였다가 2000년~2006년 도시철도 공사,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 공사 설립 등으로 인력규모가 급증하였다. 이는 지방공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사업범위도 점차 확대된 데 기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차 전문인력 등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97~'11 연도별 지방공기업 인력추이



2) 재무상태 현황

2011년도 자산 158조 6,756억 원(부채비율 74.7%), 부채 67조 8,480억 원(자산의 42.8%), 자본 90조 8,276억 원(자산의 57.2%)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7.9%, 7.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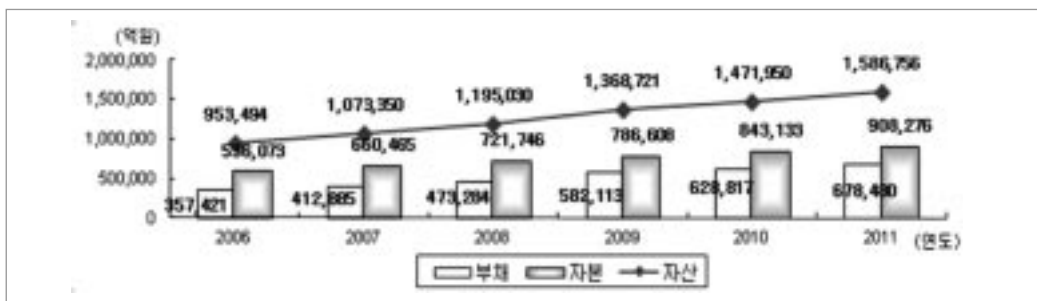
지방직영기업은 자산 73조 4,058억 원(부채비율 33.5%), 부채 18조 4,185억 원(자산의 25.1%), 자본 54조 9,873억 원(자산의 74.9%)이며 직영기업의 경우 지자체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설비투자액의 대부분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집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자본비율이 높다.

지방공사·공단은 자산 85조 2,698억 원(부채비율 137.9%), 부채 49조 4,295억 원(자산의

58.0%), 자본 35조 8,403억 원(자산의 42.0%)이며 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 부채비율이 지방직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규모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총 자산은 총 158조 6,756억 원으로 2010년 147조 1,950억 원보다 11조 4,806억 원(7.8%)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부채는 67조 8,480억 원으로 2010년 62조 8,817억 원보다 4조 9,663억 원(8%)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본은 90조 8,276억 원으로 2010년도 84조 3,133억 원보다 6조 5,143억 원(7.7%)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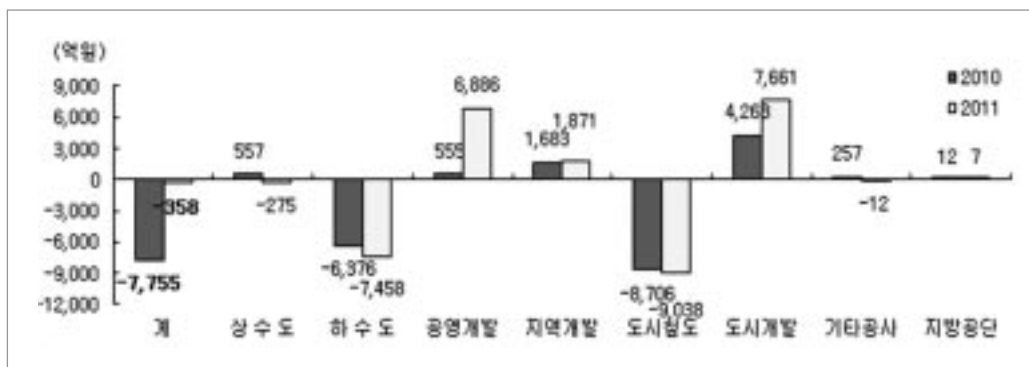
〈그림 4〉 '97~'11 연도별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하수도와 상수도의 규모가 크며 이는 시설투자 재원을 보조금 및 타 회계 부담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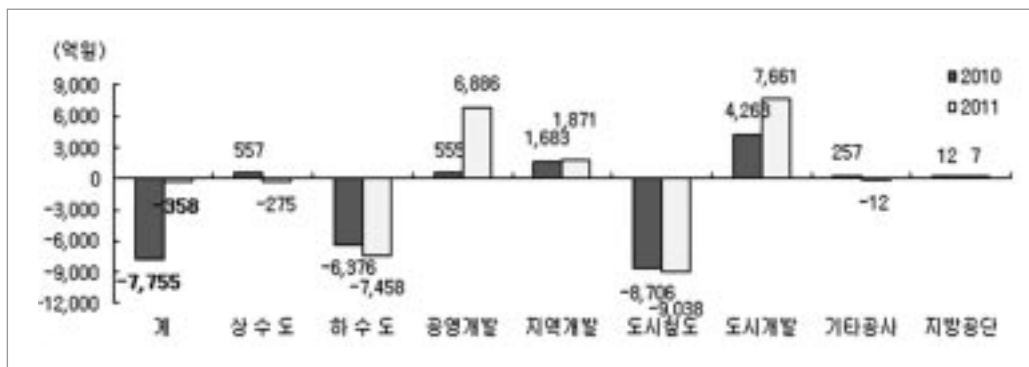
〈그림 5〉'11 지방공기업 유형별 당기순이익(손실)



3개년도 연속 손실기업은 2010년 126개에서 2011년 138개로 상·하수도,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손실합계는 1조 7,609억 원으로 전체 손실 금액 1조 9872억 원의 88.6%이며, 3개년도

연속 손실기업의 손실이 총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금 적정화를 통한 수익증대와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이 필요하다.

〈그림 6〉 3개년도 연속 손실 공기업 개수



3.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방향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현황,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 역할 증대 및 전문성 강화이다. 지역주민의 기본적 수요와 관계된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성 기반의 경영원칙과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써 양적확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 혁신성, 창의성 등을 지닌 공기업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사업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정을 도입하여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경영체제 확립이다. 기존 경영평가의 의존체제에서 탈피하고 각종 운영체제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별 특성에 맞는 행·재정 지원하며 경영상태 대한 각종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성과 지향적 운영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별 선진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되는 적자재정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모두에게 난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안전행정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13
 안용식 외2, 지방공기업의 경영분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1
 정진원, 한국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1



충남마을기행

●
공주 풀꽃이랑마을

5도 2촌 실천 앞장서는

공주 풀꽃이랑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가면 ‘산이 깊어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무성산 지락 아래 “꽃내미 풀꽃이랑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공주의 특산품은 밤이다. 특히 정안밤은 전국에서도 알아준다.

마을 이름이 예쁜 이곳은 하늘에서 보면 마치 화분에 심어놓은 꽃과 비슷하게 생겼다. 마을 앞 고성저수지는 화분을,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은 줄기를, 그 줄기에 매달린 잎과 열매는 논과 밭, 그리고 집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풀꽃이랑 마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공주시로부터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2일은 농촌에서) 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체험마을로 변화하게 된 후다.

필자는 지난 8월말 대전을 출발해 서세종IC를 거쳐 풀꽃이랑 마을로 향했다. 막히는 길도 없이 대

약 1시간정도가 소요됐다. 마침 이날 부여군 홍산면에 위치한 4개 마을 50여명의 주민들이 '희망마을 만들기 선진지견학'의 일환으로 풀꽃이랑 마을을 들렀다.

홍산면 마을주민들은 먼저 체험관에 들러 풀꽃이랑 마을 소개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발전방향 등의 교육을 받고, 다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떡매치기 체험을 했다. 체험객들은 사실 대부분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었다. 부녀회장님의 설명과 함께 찰쌀밥이 넓은 판에 처억~하니 떨어지니 떡매



〈풀꽃이랑 마을을 찾은 부여군 홍산면 마을주민들이 떡매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치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비록 떡매치기만 체험했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처럼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웃음이 묻어난다.

필자는 이날 체험마을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태(55) 씨를 만났다. 윤 위원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현재 이 마을은 약75가구 160여명이 살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약10여 가구는 귀농·귀촌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아무래도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달라서 힘들지 않겠냐고 윤 위원장은 아쉬워했다. 진정한 귀농 가구는 한 집 뿐이기도 했다.



〈풀꽃이랑 마을 윤성태 마을위원장〉

풀꽃이랑 마을은 마을추진위원회와 영농조합법인의 2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운영의 큰 틀은 위원회에서, 체험관 운영은 법인이 맡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인기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서리태콩 심기와 수확하기, 밤 줍기, 인절미 만들기 등이다. 무엇보다 연령대별 체험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운영의 묘



〈풀꽃이랑 마을 체험관 전경 및 체험장, 등산로 모습〉

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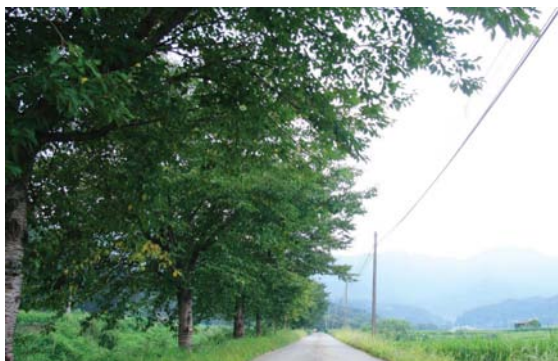
물론 이외 연간 진행되는 체험행사가 상당히 다채롭다. △먹거리체험 = 산약초 엑기스, 떡매치기, 인절미만들기, 흑두부만들기, 나물주먹밥 등 △농사체험 = 알밤줍기, 콩털기, 고구마캐기, 고추따기, 자연비누만들기 등 △생태 체험 = 산야초발효, 토끼몰이, 물놀이 등 △농산물가공체험 = 서리태튀밥, 선식, 청국장, 메주 등이다.

윤성태 위원장은 “아무래도 체험프로그램 방문객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많고, 연간 약1만명이 방문해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수확된 서리태콩 등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은 1사1촌을 맺은 기관과 직거래장터를 통해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라며 “특히 우리 마을은 정안IC와 세종시 등과 인접해있어 더 많은 방문객 유치를 위해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풀꽃이랑 마을 입구에는 1972년도에 수몰되어 만들어진 고성저수지가 있는데, 봄이 되면 저수지를 시작으로 마을회관까지 이어진 3.6km 벚꽃길이 유명하다. 그리고 저수지 뚝방에는 할미꽃 군락지가 있어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풀꽃이랑 마을은 현재 ‘정안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2014년까지 계획수립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물론 마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건물만 짓는 꼴이 되어버리면 마을의 흥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정안면에만 5도 2촌 시범마을이 8개나 있다.”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당시 지원금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데, 건물 운영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지원금 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마을의 정체성, 특색이



〈풀꽃이랑 마을 모습〉



〈고성저수지 모습〉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하는 주체들에게 전했다.

아마도 이날 풀꽃이랑 마을을 다녀간 홍산면 주민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청양의 알프스마을이 부럽다고 말하는 윤 위원장의 꿈은 아무래도 풀꽃이랑 마을이 하나로 뭉쳐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아닐까?

이듬해에는 잊지 않고 이 마을로 봄꽃 구경을 가봐야겠다. 5도2촌을 몸소 실천해보고 싶은 맘이기도.

(체험관 041-852-1255 / www.pulk.co.kr)



〈윤성태 위원장의 교육 모습〉



〈정안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완료 후 모습〉

[공주 풀꽃이랑 마을...]



● 찾아가는 길

서울 등 수도권지역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IC로 나오면 공주 방향 23번 국도로 이동... 고성저수지 간판이 있는 운궁 네거리에서 우회전 후 풀꽃이랑마을 유도간판을 따라오면 됩니다.

대전지역 : 공주 방향으로 이동 후 23번 국도로 진입해 천안 방향으로 직진... 위와 마찬가지로 운궁 네거리에서 좌회전해 풀꽃이랑마을 유도간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 ▶ 주소 : 공주시 정안면 고성길 250-34 (꽃내미 풀꽃이랑 마을)
- ▶ 홈페이지 : www.pulk.co.kr

어떤 참여인가

-누구나 쉽고 즐거운 참여로 뿌리내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하여-

정완숙 | 사)디모스¹⁾ 상임이사

참여 · 소통 · 공감 · 합의 · 협력 · 연대 · 마을 · 공동체 · 사회적경제 · 거버넌스 · 직접참여 민주주의 · 속의 민주주의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감 키워드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결과일 수 있는 것이 '참여', 그것도 형식적이거나 동원된 참여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참여의 요구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제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민의 정책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대의민주주의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징후로 드러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의 어제와 오늘

한편, 우리사회의 시민의 다양한 참여 요구에 부응한 제도 마련의 역사는 그리 깊지 않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나 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는 즉시 마련되지 않았으며,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주민참여 확대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

1) (사)디모스는 2010년 충남도민정상회의를 준비한 팀이 새로운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한국사회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1년 구성된 기관으로, 소규모부터 1,000명까지의 규모와 다양한 이슈와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참여와 소통을 실험하고 그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교육 지원(2012, 2013), 유성구 9개동 주민회의를 지원(2011~2013)하고 있으며, 천안시민 대규모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2012), 제주특별자치도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교육(2012/2013), 부산 해운대구 주민교육(2012), 부여군 교육과 주민의견 수렴 지원(2012), 태안군주민참여예산교육(2013) 외에 다양한 자리(주민참여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이 마련이 되고, 그 후 2000년 3월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발의제도], 2004년 7월 [주민투표제], 2006년 1월 [주민소송제도], 2007년 5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참여제도 중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부터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한적 수준으로 실시되던 것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2011년 초(3. 8)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 핵심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명기되어 있다.²⁾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1989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일정 기간 브라질과 남미지역에서 활성화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활동 성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실패와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재정 투명성 부족, 집행부의 예산편성기능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같은 사회적 병폐현상의 만연과 이를 개선하려는 시민사회의 개혁적 시도의 성과로 도입되고 확장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 활동에 주민이 직접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 의사결정권한의 일부가 행정부로부터 주민에게 이전되는 분권적 권한 이양(empowerment)의 성격 등을 지니며, 도입이후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처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은 종전의 수동적, 방관자적 입장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독점적 지위와 관료적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주민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며 주민참여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의 숙제를 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보자.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의 요인과 과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건을 꼽으라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행정의 헌신성, 의회와

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1. 3. 8 개정〉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2011. 3. 8 신설〉



의 협력적 관계 구축,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모델 개발, 참여 역량의 지속적 개발, 일회성 극복 (교육과 사업발굴, 회의 등의 일상성 확보), 질 높은 대상별 교육과 학습 기회의 제공, 주민회의의 참여적 민주적 설계 운영방법(불만 없는 회의 운영)과 역량의 준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후 정착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장애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략 더 보완하거나 풀어야할 대표적인 숙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시각(공무원의 인식),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 낮은 주민참여와 주민 대표성의 한계, 참여의 공정성, 참여수준 영역 등에 대한 혼란, 시민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편성 우려, 예산편성 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한계, 주민사업 발굴방법의 어려움, 주민회의의 참여적 민주적 설계 운영방법(불만 없는 회의 운영)과 역량의 준비, 질 높은 대상별 교육과 학습 기회의 제공 방안, 일회성 극복 방안 마련 등이 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글쓴이가 지원한 경험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교육,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마을회의, 전문가회의, 토론회 등에서 지역과 규모와 유형을 떠나 공통적으로 각각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참여현장의 목소리는 이렇다.

■ 정보와 학습

“이런 거 있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지루한 교육인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테러를 걸..”, “알아야 될 해도 하죠. (교육과 학습기회)”,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담당공무원 외에는... 참여하라 해서 왔는데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네요”, “공무원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일부 담당공무원들만 알죠”, “홍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 실정에 맞는 모델 확보

“해야 하니 이리저리 고민해 보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타 지역 사례도 보기는 하는데 우리지역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지역에 맞는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직은 낮은 참여

“명석을 깔아놔도.....”, “인식부족이 심각해요.”

■ 협력의 과제

“시민사회 협조가 잘 안돼요”. “실제 협력을 구할 시민사회가 부족해요.” “시민사회가 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공무원들과 의회의 의지가 문제예요”

적어도 실제 참여와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입장으로, 행정은 행정의 입장에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한 발짝 더 다가서서 그 입장이 되어 어려움을 살피는 것, 스스로 협력할 방안을 찾는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참여’가 답이고, 서로 간 지혜로운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쓴이의 기관이 지원한 한 참여예산마을회의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387명 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46.7%)’,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26.9%),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나서서(19.8%), 동네의 어른들이 나서서(4.7%), 기타(1.8%)로 응답했다. 이 응답결과를 보편화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참여여야 하는가

과정이 즐거운 참여(쉬운 참여), 실질적인 참여(형식적이고 동원된 참여가 아닌), 다양한 참여, 균형적인 참여,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참여(책임있는 참여),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참여이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스스로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정책의 수립 전 과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형태를 열어 놓는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늘 개방하고 늘 경청한다면 참여자들도 제안의 주체에서 공동행동과 책임을 함께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기꺼이 거듭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주민의 참여 자세와 성숙도는 그렇다고 본다.

긴 호흡으로 점검할 때

행정은 흔히 어떤 제도와 일을 도입하고 추진할 때 소위 선진사례에 귀를 기울인다. 개인이나 민간기관도 다르지 않을 터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특히 고만고만하게 출발해서 나아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인 것 같다. 특히 직접참여 모델의 경우는 한 모델을 일반화하기 더더욱 쉽지 않다.

글쓴이도 초기에 어느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비슷하게 적용하고자 하다가 해당지역 참여자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에 부딪힌 경험이 있으며, 비슷한 여러 사례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하기도 한다.

3년 정도 되니 대략의 지방자치별 행정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대략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이제는 우여곡절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간 점검을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참여의 모델을 안정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다. 금새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서로 간 신뢰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주민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어도 현장의 참여자들은 교육이건 마을회의이건 새로운 참여와 소통 방법으로 생각을 펼치고 참여적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은 과정에 즐겁게 몰입했고, 스스로 새로운 내용과 미래를 창조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결과는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다.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로 '참여가 답이다.'

충남 6차산업화 홍보 현장을 가다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김현숙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김영수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었다. 엑스포의 참가를 통해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확대·전환하고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해서다.



비록 우리의 6차산업화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기엔 부족한 공간이었지만 부스의 벽면에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더유' 사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자력으로는 엑스포 참가가 어려운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인분들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엑스포 참가의 취지 중 하나인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미더유'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스내 전시물이 나타내는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미더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퀴즈로 풀어보는 이벤트를 주력으로 결정했다.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품은 기본! 퀴즈를 풀기 위해 이벤트 내내 진행자가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및 '미더유' 사업에 대해 반복되는 설명을 함으로써,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뿐 만아니라 부스 주변 관람객들에게까지 인지시킬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엑스포 기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주말 오후시간대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총 7일간 센터 부스에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이 약 1,000명이나 되었다.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의 홍보를 지원하고자 본 센터의 부스에 참여한 업체는 총 10개. 충남에서 규모가 작고 영세한 6차산업화 경영체를 선정했다. 비록 짧은 했지만 3일씩 두 개의 경영체가 돌아가면서 업체홍보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드렸다.

이 기간 동안 매출 500만원을 기록한 경영체도 있었지만, 모든 업체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기간 내 유통과 마케팅 부분에서 부진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고 눈앞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일본 도쿄대 '이마무라 나라오미' 명예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데, “농업은 1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 및 3차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2차 3차 = 6차)를 전개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성,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6차산업화라는 의미가 국내에 급속하게 도입된 것은 최근 2~3년. 일본에 비해 역사가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의 6차산업화라는 개념이 도입



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농업·농촌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 었다.

학술적으로는 급격하게 도입된 시기가 최근이지만 농업기반의 사업화인 6차산업화에 대하여 개념도 입 이전부터 고민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모아보았다. 인터뷰의 응답자는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서 본 센터의 부스에 자사 홍보를 위해 참여한 6차산업화 경영체의 대표 중 세 개 업체의 대표로 배가원의 배수영 대표, 꾸지나무골 영농조합법인의 김진현 대표, 해담골의 임은주 대표다. 현장에서 느끼는 6차산업화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배가원



조상들의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현대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웰빙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별한 조리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장



아찌를 생산하고 있다.

총 20여 종류의 장아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장아찌 외에도 메론, 곰취, 구기자 등의 장아찌도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재료를 자가생산하거나, 주변농가로부터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다.

최근 들어서 웰빙식품, 힐링푸드, 슬로푸드 등 음식을 통해 몸을 이롭게 하고자하는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 흐름에 발맞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장아찌 비법을 토대로 장아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6차산업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6차산업화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에서 주관하는 '6차산업화리디아카데미'를 통해서 6차산업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 내가 생각하는 6차산업화란?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하며 도시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없어 노동력도 부족한 현실인데, 6차산업화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며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판매를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택배로 장아찌를 보내다보니 택배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점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며, 장아찌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소량생산체계에서 대량생산체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를 통해 느낀 점은?



6차산업화센터의 부스에서 장아찌를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지만 3일 동안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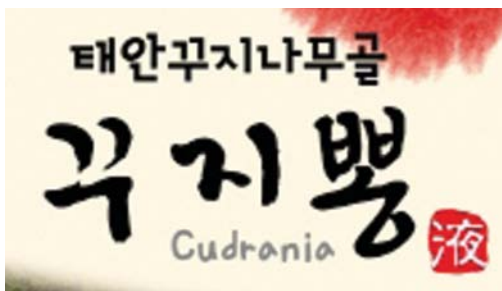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와 상품이 판매되는 장소, 가격 등을 고려해야겠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식품기업관 내에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였는데,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업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국제엑스포로서의 조건을 갖추는데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식품기업관 내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구색이 편향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국외 업체의 참가수도 적었지만 국내 업체의 지역적 분포가 충남에만 편향되었고 품목 또한 다양하지 않았다.

△ 앞으로의 6차산업화 계획은?

배가원은 현재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규모를 확장시켜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규모가 확장되면 농촌에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림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으로도 발돋움하고 싶다. 현재는 여력이 안 되지만 수익창출이 커지면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업체가 되고 싶다. 또한 배가원을 통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싶다.

2. 꾸지나무골 영농조합법인



충남 태안군 이원면은 꾸지뽕나무의 자생지로서 꾸지나무골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꾸지나무골 영농조합 법인은 꾸지나무골에 위치해 있다. 꾸지뽕액기스를 상품으로 2012년 마을 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사업 2년차인 현재는 조합원수가 11명으로 증가하였다. 꾸지나무골에는 '꾸지나무



골해수욕장'과 트레킹코스인 '솔향기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객이 4~5만명 정도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해보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6차산업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고향인 태안으로 귀향하면서 2008년부터 만대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상품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있던 와중에 충남도의 3농혁신과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 내가 생각하는 6차산업화란?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로 농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도농교류가 이뤄진다면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농교류를 활발히 추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6차산업화라고 생각하는데, 1차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마을기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보니 원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었다. 처음 시작은 귀농한 분들을 필두로 출자자가 저를 포함해 5명이 전부였지만, 1차 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마을 원주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로 현재는 출자자가 11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를 통해 느낀 점은?

엑스포를 참여하기 위해 준비가 미흡했음을 느꼈으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그 이목이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전략을 터득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6차산업화센터에서 제공해준 홍보공간의 위치였는데, 업체들이 줄줄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홍보관 형태의 부스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위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보다 적어서 홍보 및 판매가 부진했다.

하지만 여타 업체들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및 교환을 할 수 있었고 포장재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 또한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꾸지뽕의 효능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엑스포 참가 후에도 방문해주셨던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으며,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앞으로의 6차산업화 계획은?

꾸지나무골에 방문해 주시는 도시민들이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페에서는 꾸지뽕엑상차와 꾸지뽕잎차 등을 제공해드리면서 방문객들이 마시고 있는 차류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해 제공되는지 체험을 통해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한다.

인도의 속담 ‘빨리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고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처럼 농촌의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푸른숲을 느리지만 다함께 가꿔나가고 싶다.

3. 해담골



해담골은 장류업체이지만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어육장’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장을 담그고 있다. 해담골의 임 대표는 논산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논산의 강경에서 젓갈장수 아주머니가 가져오시던 생선으로 담은 된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과 외숙모로부터 전수 받은 장 담그는 비법을 이용해 특색있는 장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육장’은 예로부터 왕가와 사대부에서 담가먹던 장으로 염장을 통한 고기의 저장 외에는 보관이 어려웠던 시절에 고기로 된장으로 담궈서 저장기간을 늘리고 이를 국으로 끓여서 먹었다하는데, ‘산림경제’ 등의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누구나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어육장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어육장 외에도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고추장과 인근 부여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이용한 토마토 고추장도 개발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6차산업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의 전신기관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운영될 때부터 사업화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6차산업화센터가 설립되면서 ‘6차산업화 리더아카데미’를 통해 6차산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 내가 생각하는 6차산업화란?

현재 행정과 기관 등에서 얘기하는 6차산업화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하는데, ‘농업은 앞으로 6차산업화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운동적인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 6차산업화를 알게 되었을 때, 6차산업화가 분명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6차산업화센터에서 6차산업화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바탕으로 현실성에 부합하는 6차산업화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장류사업은 항아리에서 장이 숙성되기까지 기간이 길고 자연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균일화된 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있지만 자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를 통해 느낀 점은?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마케팅에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느꼈다.

△ 앞으로의 6차산업화 계획은?

자녀들에게 장류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가고 싶으며, 더 나아가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과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다.

캐나다 퀘벡주, 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장효안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송두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캐나다 속 작은 프랑스 퀘벡,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한 각종 프랑스풍 건물들이 즐비하고 인구의 95%가 불어를 사용하며 프랑스식으로 생각한다. 캐나다 내에서 프랑스인으로 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일상에도 녹아 있다. 18세기 프랑스령이었던 퀘벡주는 영국군에 점령당한 후 피의



보복을 당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영국문화 수용을 거부했고, 그 전쟁의 패배와 조상들의 투쟁을 잊지 않기 위해 퀘벡주의 모든 차량 번호판에는 'Je me souviens(나는 기억한다)'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 이쯤 되면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퀘벡인들의 긍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외부인의 눈으로 보자면, 원주민의 땅과 삶의 터전을 무력으로 점령한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이 똑같지만, 식민지 문화 유산과 열강 속의 삶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퀘벡인들의 노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협동과 연대가 핵심 요소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퀘벡에서 잘 발전하게 된 것은 퀘벡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퀘벡에는 3,300여개 협동조합과 퀘벡인구(780만 명)보다 많은 880만 명이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샹티에(chantier)에 가입한 조직이 8,000여개로,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만 25,000여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이 퀘벡주 내 총 생산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퀘벡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이와 같은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는 어떤 노력

이 있었을까? 지역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CDR, CDEC, CLD의 활동을 통해 이들의 노력에 다가가 보자.

지역개발협동조합(CDR)

CDR은 지역 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CDR자체도 법률상으로 협동조합이고, 지역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CDR을 통해 설립된 개별 협동조합들이 CDR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된다. 퀘벡 내 17개 행정구역에 총11개의 CDR이 설립되어, 총 1,2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아우르고 있으며 전체 60여명의 직원이 CDR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CDR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간 협력을 도모하며, 협동조합을 알리고 협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 세 가지 역할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방문한 우타우에-로랑티드 지역 CDR(CDROL)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자

우타우에-로랑티드 지역개발협동조합(CDROL)

CDROL은 퀘벡에서도 첫 번째로 만들어진 CDR이다. 1974년에 창립되어 2014년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처음 CDR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은 업종이나 분야(sector)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금은 매우 보편화된 접근방식이지만 CDR은 '지역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획기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타우에-로랑티드 지역의 총 200여개의 협동조합 중 150개 협동조합이 CDROL에 참여하고 있다. 즉, 이 150개 개별협동조합이 CDROL의 조합원인 것이다. 이들이 매년 총회에서 의장, 부의장, 서기, 회계 등을 선출하며, 총 9명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CDROL의 주요 사업은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협동조합 간 협력, 둘째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 안정화·확장에 필요한 자원 연계, 셋째,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및 의식 확산 등이다.

여기서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은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CDROL의 영토가 50,000km²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충청남도의 면적은 8,204km²임) 매우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인터뷰한 패트릭 듀게이(Patric Duguay) 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3명의 직원은 CDROL이 담당하는 영토를 고려해 보면 매우 작다. 그러나 나는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 협동조합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OL지역에서 기업 운영기법, 재정, 시장분석, 인력 관리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OL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CDROL이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는 창업 초기 ‘협동조합적’ 성격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다. 그러나 사업적인 다양한 차원의 욕구는 주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뒤에서 살펴보게 될 CIDX기업지원서비스에 특화된 조직)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한 CDROL은 OL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협동조합 간 혹은 지역자원의 연맹을 형성하

고, 지자체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CDROL의 재정은 연간 약 70만 달러인데, 이 중 절반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다(다른 CDR은 약 75%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오는 돈’의 성격에 대해 퀘백 다수의 협동조합은 우리식의 보조금이 아닌 ‘산출한 성과의 대가’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권리로 보는 관점이 분명하다. 실제로 활동성과를 정부에 보고하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기업 등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조달한다. 전체 예산의 약 75%는 인건비, 25%가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는 차량운영비로 사용된다.

퀘백은 중앙정부-협동조합연합체간 유기적이고 수평적 관계가 전체 협동조합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실제로 퀘백주정부는 CQCM이라는 협동조합연합체와 협약을 통해 협동조합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

CQCM내에도 CDR연맹이 별도로 존재하며 CDROL도 CQCM에 회원으로서의 회비를 내고 있다. 그러나 CDROL은 CQCM과 같은 대표조직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부의 에이전트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에이전트’가 된다는 의미는 бюро크래시(bureaucracy), 즉 관료적 행정이 자리잡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와의 교섭단체로써 대표조직의 위치가 공고화되면 대표조직 내 조직들 간 힘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즉 힘이 큰 조직의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조직 내에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을 기본 구조로 하는 협동조합에게 매우 위험하다. 또한 협동조합만 대표하는 기구로써 전사회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것이 겨우 1996년에 설립된 샹티에 7,000개 이상의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들이 결합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저는 CDROL의 사무총장이자 샹티에(Chantier)의 공동의장이지만, CQCM의 회원이기도 하다. 우리가 샹티에에 가입한 이유는 협동조합이 보다 포괄적인 운동을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지역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에 구체적인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CDROL의 가치 및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과 공고화.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견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조합원 및 주체의 이익과 전사회적 문제 해결이 늘 한 방향을 향하지는 않는다. 이 가치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CDROL의 사례와 활동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에 무거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지역개발공사(CDEC) – RESO

CDEC는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직이다. 우리가 방문한 RESO는 1989년에 CDEC 중 가장 먼저 생긴 조직으로 80년대 후반 몬트리올에서 가장 낙후된 몬트리올 서남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RESO의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기억할 것은 RESO가



해외리포트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역사회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2년 간 운영됐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정부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민이 참여해 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년 간 논의하고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그 제안 중 하나로 일정 조직이 지역개발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RESO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RESO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만들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RESO는 스스로 지역사회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도구로 상정했다. 비영리조직인 RESO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 외의 별도의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는데 이를 콜레주라고 부른다.

콜레주는 지역의 10개 부문 및 분야로부터 대표를 뽑아 운영주체로 삼는 과정이다. 10개 분야(제조, 서비스 및 새로운 경제, 자영업, 금융업, 사회적경제 기업, 노동조합, 문화, 건강 및 교육 기관, 기타 지역사회 인사, RESO직원)에서 17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RESO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RESO의 회원은 총 400여명(개인회원+조직회원)으로 매해 총회에는 200~250명이 참석하고 있다. RESO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바로 활발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였다. 모두 예상했겠지만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RESO의 주요한 현안이다. 10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선출된 대표들로 RESO의 살림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인 Pierre Morissett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꾸준한 교섭과 혼자 일하는 업무 스타일의 변경, 상호 간의 끊임 없는 토론 등 긴 시간동안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했다. 그리고 ‘빈곤’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적인 문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한 요소였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RESO는 다섯 가지 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산하고 둘째,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셋째, 지자체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넷째, 정부와 기업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욕구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면서 다섯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보살피고(care), 개개인에

게 동기부여(empowerment)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를 바탕으로 RESO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RESO 재정의 2/3를 사용한다. 16살부터 은퇴자까지 대상은 열려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놀랍게도 40%의 퀘벡주민들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이 RESO의 분석이다. 둘째, 기업을 지원한다. 재정지원과 필요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특히 재정지원에서 4-5개의 서로 다른 재원(fund)에 기초한 분산 지원(투자)을 하는데, 이 분산 지원의 개념을 CLD에서 주로 벤치마킹하게 된다. 셋째, 지역차원의 자원과 정보를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찾아내고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DEC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지역 재생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꽤 많은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가 그렇듯 CDEC의 활동은 정부에도 영감을 주었으리라. CDEC의 활동 중 기업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분산지원을 하는 방식 등이 정부에 의해 대량 육성된 CLD에 특화되었고, 기존의 역할을 다른 조직들이 부분적으로 특화하자 실제로 상당수 CDEC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퀘벡에 존재하는 13개 CDEC 중 9개는 CLD연맹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CDEC가 지역사회 내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소위 '획기적(hot)'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RESO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을 들이고, 효율성면에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콜레주를 운영하고 있다. 이 끊임없는 소통이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CDEC와 달리 RESO가 건재하게 운영되는 힘이라고 생각된다.

지역개발센터(CLD) – CLD de Quebec

CLD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은 쉽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떠올리면 된다. 지역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LD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CDEC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CDEC가 지역 내 기업들에 분산 지원을 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또한 지역사회투자를 수행하기도 하며 퀘벡주내에 120개가 설립운영중이다. 그러나 120개 CLD가 지역사회와 맺는 관계의 방식과 깊이는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운 좋게도 CLD중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로 꼽히는 CLD de Quebec을 방문할 수 있었다. CLD de Quebec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을까?

CLD de Quebec은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80%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결사체이다 (나머지 20%는 기업 재정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다). 여느 CLD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기업서비스 제공을 기본사업으로 한다. 5,000달러~15,000달러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퀘벡 내에서도 소·중기업을 상대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CLD de Quebec은 퀘벡시티 지역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뒤에서 설명할 열린포럼이 이들과 시민이 소통하는 창구이다.

전체 구조에서 보면 CLD de Quebec의 주요

사업은 크게 기업지원서비스(창업, 사업확장 및 유지 등)와 지역사회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기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찾아와 상담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원의 성격은 창업(50.5%) + 사업확장 지원(16.5%) + 사업유지(11.5%) + 지역사회투자(15.5%) + 기타(6%)로 나타났으며, 크게 일반기업(59%)과 집합기업(41%)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집합기업이란 지역 내에서 사회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우리 식의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기업은 100% 상환을 요하는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며(8% 금리포함) 집합기업은 부분적으로 대출을 하거나(금리 무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50명의 직원 중 지역개발팀에 속한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CLD의 재정적 기업지원은 분산 지원(투자)을 기초로 한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100이라면 CLD는 이 중 30이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LD는 투자처이자 서비스지원처의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CLD에서 투자를 결정하면 다른 투자처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훨씬 용이하다. 즉 CLD에서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다른 투자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CLD de Quebec의 2012년 총 기업 투자액인 168만 달러는 결과적으로 2,000만 달러의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협동조합도 지원한다. 역할로 보자면 CDR은 법률 및 가치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 CLD는 마케팅, 기업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CLD de Quebec은 특히 그들의 지역사회 역할에 강조하고 싶어했는데, 지역사회에서 CLD의 역할을 찾기 위해 이미 CLD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열린포럼을 6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슈 없이 모여서 지역사회 현안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이 열린포럼의 역할이었다. 현안을 의제로, 의제를 다시 구체적인 전략으로 6개월 동안 좁혀나가면서 2012~2017년 CLD 5개년 계획을 작성했다. 이 5개년 계획에서 주민들이 설정한 가장 주요한 원칙은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이었고, 그 주요 주체를 지역 내 기업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농업이 결정되었고, 이에 CLD de Quebec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영역은 농업>첨단테크놀로지>제조업의 우선순위로 정해졌다.

그러나 열린포럼의 구성원은 이미 CLD de Quebec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 있었던 기업들이 주 대상이다. 만일 열린포럼의 구성원이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로 주로 구성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쟁점들

여러가지로 운이 좋았던 연수였다.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보기위해 고려했던 CDR, CDEC, CLD 중에서도 우리가 방문한 CDROL, CDEC-RESO, CLD de Quebec은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고민하기 위해 분투하는 조직이었다. 지금 조직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만큼 분명한 것이 있을까.

먼저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주정부-민간협력체의 협력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 협력체인 상티에는 그 성장이 실로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티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운동의 방향과 내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티에에 소속된 8,000개 이상의 조직들의 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꽤 많은 협동조합들이 포함되는데, 협동조합 협력체인 CQCM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이 성장하여 정부와 협상의 파트너가 될 때 협동조합 내부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성장의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적 부로크래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과 전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결을 달리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걸까?

이 세 조직의 사업을 봤을 때 소위 '획기적인(hot)'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CDROL을 상티에라는 협력체의 주요 주체로 성장시켰으며, 무엇이 CDEC-RESO를 다른 CDEC와 달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으며, 무엇이 CLD 투자결정의 힘을 강화했을까? 이 세 조직은 직접사업을 하기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의 조직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데 있으며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에서 스스로를 '도구'로 위치 지운다. 도구 자체에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현안을 혼자 끌어안으며 다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키우거나 '우리가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해'라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중요하다. 말과 행동은 다르다. 정말로 우리 조직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CDR은 OL지역 협동조합을 연합하여 협동조합 발전을 모색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초기 지원에 집중한다. CDEC는 지역사회 현안을 두루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재창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지난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다. CLD는 기업지원 서비스로 특화된 조직이다. 그러나 각자의 지역에서 열린 공간을 통해 CLD가 지역사회와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명확히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역할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맺어진 다양한 조직 및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가된다. 이 조직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외의 역할은 외부자원과 연계해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외부자원이 성장하게 된다. 내가, 내 조직에서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함께 성장하겠다고 결심하면 취약했던 외부자원도 역량강화가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OL지역은 충남 전체 영토의 6배 이상으로 거대하다. 이것이 이런 거대한 땅에서 400명의 조합원 중 250명이 총회에 참여하는 CDROL의 힘이 아닐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조직 육성에서부터



김병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
본부장

농업이라는 산업의 순기능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이러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합리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농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민선 5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향토문화를 전승하면서 도농상생교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자”는 3농혁신 정책을 도정 제1의 핵심목표로 삼아 추진 중이다.

농업은 인류가 정주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되어온 산업이다. 수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온 농업의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업부문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과학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되풀이 되는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 문제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이러한 자연재해 문제를 비롯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문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등이 농업을 둘러싼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양한 농업문제 중에서 생산자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자가 제 값을 받으면 자연스레 농업소득이 늘어나고, 농업소득이 늘어나면 젊은 농업인구가 유입되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문제가 해결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농업인이 제 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가구 중 1인 또는 2인 가구의 비율이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가구는 대형 할인점보다는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고, 1인용 소량으로 공급되는 간편조리 식품을 선호한다. 농산물 역시 작게 포장한 채소나 과일이 잘 팔린다고 한다. 쌀의 경우도 과거 80Kg 단위의 가마에서 20Kg 포대로 포장단위를 줄여오다 최근에는 10Kg, 4Kg의 소포장이 대세로 변해가고 있다. 소인가구의 증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트렌드’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중 26.5%는 슈퍼마켓에서, 25.5%는 재래시장에서,

22.7%는 대형마트에서, 3.8%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이미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을 앞질렀고, 비중은 낮지만 인터넷 등 직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보고서는 1인가구의 증가와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거리쇼핑이 늘어나면서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해마다 1~2%씩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우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가기능을 갖춘 기능성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충남농업기술원은 항암배추, 칼슘배추, 비타민C배추 등 기능성배추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건강 중심, 웰빙 위주의 소비지향을 보이는 것도 농업인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 농업인이 애써 키운 농산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확 후에 선별을 통한 규격화, 표준화 등 추가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더하지 않으면 제 값을 받기는커녕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생산현장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농업의 평균경지규모는 1.5ha로 가족농 중심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규모화를 꾀하여 왔으나 쌀을 비롯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65세 미만의 농업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도전을 이끌 리더 농업인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농업생산 현장은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역에 있는 농협에 방문해 보면 시장에 내다 팔 농산물이 없다고 말하는 농협도 일부 있다. 많은 조합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 물건이 없다는 말은 각각의 농가가 관행농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산물 소비시장은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슈퍼마켓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물량의 규모화, 농산물의 전처리, 소포장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영세소농들이 각기 다른 품종을 자기방식으로 재배하고 출하한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

는 것일까?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볼 때, 경지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면 공동생산을 통한 규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작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리더 농업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품종을 통일하여, 재배기술을 비롯해 해당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규모화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공동선별·포장 후 출하하면 농업인은 일손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의 시설을 이용하여 예냉 등 전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작은 마을단위에 그치지 않고, 읍·면단위로 그리고 시·군 단위로 확대되어 간다면 농업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의 좋은 사례가 바로 금산 깻잎이다. 1980년대 후반 소수의 농가가 생산하기 시작한 깻잎은 현재 금산군의 대표 농산물이 되었고, 전국 깻잎 시장의 40%를 금산군에서 생산·출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산지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을 규모화해야 한다는 것과, 농업인과 농협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화된 농가들이 함께 깻잎을 생산하여 이를 농협에 출하하면 농협은 APC시설을 이용해 세척, 소포장 등의 과정을

거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공판장 등 다양한 시장에 출하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은 규모화 된 물량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키우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APC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지 농산물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품목을 선정하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공동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한다면 산지수집상의 농간을 배제할 수 있고,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금산 껌잎의 사례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육성하고 농협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APC 등의 시설지원도 조직화가 잘 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협도 정부가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자들을 조직화 하는 일에 앞

장서야 한다. 농협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금융소비자의 주권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지역의 조합원과 농협이 농산물 유통의 주체가 되어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간다면 우리 농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농업인이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대우받던 시대는 아주 오래전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농업의 중요성이 덜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인구의 노령화, 각종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소중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농협의 역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 사람만 모르는 3가지 진실



권오덕
前대전일보 주필

- ▲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 줄 너무 모르고
- ▲ 일본과 중국이 무서운 나라임을 모르며
- ▲ 북한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임을 모른다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첫째는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인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모르며, 셋째는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세계인이 무서워하는 중국 일본 북한을 너무 깔보고 있는 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너무 낮춰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만 잘 모르는 세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한국은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됐지만, 52년 전인 1961년엔 불과 82달러였다. 아무리 화폐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엄청난 성장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250여 국가 중 12~13위의 경제대국이다.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고, 외환보유고도 세계 4~5위권이다. 대학진학률 1위, 선박수주량 1위, 초고속 인터넷접속 1위, 자동차생산 5위이다.

인천공항 8년 연속세계서비스 1위, 기능올림픽 단골 우승국이다. K팝과 드라마 한류열풍은 세계를 휩쓸고, 동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 등 4대 스포츠를 6번째 개최하는 나라로서 스포츠강국이다. 2012년 6월 23일 우리는 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20~50클럽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다. 일본(87년)이 맨 먼저 가입했고 이어 미국(88년), 프랑스(90년)이 태리(90년)순이다.

이어 독일(91년), 영국(96년)이 가입했다.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소득이 안 되고, 소득이 높은 캐나다, 호주 등은 인구가 부족해 당분간 이 클럽에 가입 못한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한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고, 삶의 질도 많이 상승했다. 물론 빈부격차 등 개선해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요즘도 특하면 독재국가 운운

하며 여야가 싸우니 우스운 꼴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산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 이처럼 산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전국 곳곳에는 아름다운 산하가 널려 있어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면 이를 쉽게 느낀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웃의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일본을 보자. 일본은 면적이 37만8천 평방 km로 남한의 3.7배, 인구는 1억2천700만 명으로 남한의 2.5배다. 1인 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아직도 반성 없이 극우로 치닫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오늘날의 유럽경제가 있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일본은 불과 100여년 만에 이루어냈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한일합병으로 우리의 국토와 주권을 빼앗은 침략국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은 언제든지 그들과 맞장 뜨자고 덤비고, 심지어는 '쪽발이'라고 비하한다.

인류역사상 중국처럼 큰 나라는 없었다. 면적이 960만 평방km로 유럽 23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고, 인구 역시 13억 5천만 명으로 대국이다. 20-30년의 짧은 기간에 이토록 대대적인 변화를 겪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지난 2010년 일본을 따라 잡고 2050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함께 G2(Group of 2)로 불리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흥초강대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을 짱궂, 폐놈이라고 비하하며 우습게 안다.

이제 북한을 보자. 그들은 최근 남한과 개성

공단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 발자국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믿기엔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핵을 이용한 그들의 장난에 세계는 지쳐있다.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 연평해전, 문세광의 육영수여사 시해,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121사태 등 수많은 침략이 있었지만 남한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 무딘 편이다. 그들의 도발과 침략이 일상화 되어 만성이 되어서일까? 남한주민들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아무리 하더라도 미동도 않는다. 북한이 얼마나 큰 위협적인 존재인줄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치료불능의 만성불감증이 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국내뉴스를 보면 금방 난리가 나는 줄 알지만 귀국해보면 의외로 차분한데 놀라게 된다. 북한의 도발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주눅 들지 않는 것은 내세울만한 장점이다. 그만큼 우리의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중국 북한의 실상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항상 대처하는 준비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신문 방송을 보면 당장 경제가 거덜날 것 같고, 사회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실재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다만 빈부, 계층,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국민들의 질서의식제고와 부패근절이 시급한 과제다. 이웃 중국, 일본과의 유대 및 대북관계개선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이다.

‘도민인권기본계획’ 집단지성으로 푼다

— 9월 10일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타 시·도 사례 사전학습 등 진행



충남도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 및 타 시·도 사례 사전 학습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형 도민인권증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강현수 충남발연 원장의 ‘지역사회의 인권의 의미’에 관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워크숍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의 ‘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인권특강과 정정길 서울시 인권팀장의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관한 사례발표, 이수철 충남발연 연구원의 ‘충남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시사점’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현황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준수와 기본계획 목표의 적합성과 지역 특수성 고려한 실행가능성을 고려사항으

로 강조했다.

정정길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수립과정과 성격, 기본계획 체계를 살펴본 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대표사업인 인권약자 인권증진,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수철 충남발연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 인권기본계획에 담을 기본원칙으로 ▲도민 삶의 밀착성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지역의 특수성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인권기본계획에 담을 세부 설계 내용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 인권기본계획 학술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도내 마을 기업 14곳 더 키운다

— 최대 2년간 8000만원까지 지원…
일자리·경제 활성화 기대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 단체로 추가 14곳(신규 13·재선정 1)을 최종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도는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추정사업비 8억6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마을기업을 14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육성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공주시 춤추는

꽃동네 협동조합 등 2곳 ▲보령시 꿈이 익는 먹방마을 등 2곳 ▲아산시 송악동네 사람들 3곳 ▲논산시 안산마을 공동체회사 등 2곳 ▲서천군 해돋이 정보화마을 ▲청양군 (주)동강 ▲홍성군 왕대골 농촌체험마을 ▲예산군 느린 손 ▲태안군 갈두천 협동조합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마을기업 신청단체 발굴과 교육을 위한 설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67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번에 신규 13개 기업이 추가되어 총 80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새 주소로 바꾸고 경품 받으세요

- 도, 11월 30일까지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실시

충남도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회사 등이 보내는 우편물의 수신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때 각 개인이 일일이 전화해 변경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 참여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나 KT 주소변경 서비스

(www.ktmoving.com)에 접속, 카드사와 은행, 보험사, 쇼핑물 회사 등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무료로 변경하면 된다.

변경 신청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자동차, LED TV, 온누리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알기 쉽고 쓰기 쉬운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소변경 사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주소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농혁신 가속·가시화' 하반기에도 온힘

- 1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5대 전략과제별 성과 등 점검



충남도는 8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3농혁신위원,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상반기 '3농혁신 가속·가시화' 성과를 살피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보고회는 총괄보고와 TF팀별 추진상황 보고, 시·군별 특화사업 보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5대 전략과제별 주요 성과를 보면,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도 대표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전문 재배단지 조성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생산체계 구축 ▲지방정부 최초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운영 ▲친환경 갯벌참굴 홍콩시장 첫 수출 등 충남 수산 4대 명품화 노력 가속 ▲산채 재배단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성과로는 ▲생산자 중심 산지유통 활성화 전문조직 출범 및 제도 정비 ▲학교급식센터 4개 시·군 신규 설치계획 확정,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구축 ▲농어업 6차산업화 전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지역 내 농산물 유통 촉진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이 보고됐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는 ▲258개 마을 발전계획 수립 ▲마을마들기 사업 전담 TF팀 설치 도농상생복합 시범단지 추진 등이, 도농교류 활성화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계적 육성 및 시설보강 지원 관리 ▲유관기관·단체간 융복합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 지역리더 육성은 ▲3농혁신대학 17개 과정 2154명 운영 ▲지역리더 아카데미 운영 ▲전국 최초 전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이 성과로 보고됐다.

시·군 특화사업으로는 ▲천안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 10% 확대 ▲공주시 고맛나루 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확보 ▲논산시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부여군 우렁이 농법을 통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 ▲청양군 2020 부자농촌만들기 프로젝트 등이 각각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안희정 지사는 “3농혁신은 정책 성격상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필수적

이라고 강조하며 “행정과 민간, 시·군과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3농혁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 등 3개 연구기관, “충남문화정책연구포럼” 운영

– 정부의 문화융성 대응, 충남의 문화정책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문화정책 대응과 방향 모색을 위해 “(가칭)충남문화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3개 기관은 9월 11일 충남연대회의실에서 “충남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명대학교 양현미 교수의 “충남 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성환 원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정섭 원장,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 (사)공간문화

센터 최정환 대표, 공주대학교 진종현 교수, 순천향대학교 변재란 교수, 호서대학교 김교빈 교수, 충발연 이성우 사무처장 및 이인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연·학·민의 구심점 부족으로 행복한 충남도의 문화정책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포럼활동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충남의 문화융성과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발연 등은 본 포럼 운영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 등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 ‘미더유 식당’ 상징등 불 밝혀

- 지역 농산물 생산자 정보망 개설 등 홍보활동 강화



9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발연’)은 올해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 ‘미더유 식당’ 상징등에 불을 밝혔다.

인증식당을 대표해 제등식을 가진 곳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퓨전일식 ‘해상공원’. 이 식당은 지난해 예비인증식당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 농산물 사용량, 위생, 맛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충발연 부설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미더유 사업이 지역농산물의 중요성과 소비자 신뢰에 대한 인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미더유 인증식당 홍보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역 농산물 사용 외식업체의 발굴·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발연은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홈페이지(www.cdi6.re.kr)를 통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생산자 정보망’을 개설했다. 이 시스템은 외식업체, 소비자, 농산물 가공업체 등이 필요한 지역 농산물 정보를 얻어 상호 직거래에 활용토록 제작한 것이다. 향후 미더유 인증식당 확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시스템 개선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에 취임

충남발전연구원은 8월 1일 중부대 강현수 교수가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 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리고



영국 옥스포드대·미국 MIT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충발연의 새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역량을 넘어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그동안 연구원을 훌륭히 키워온 연구원 가족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로컬이 곧 글로벌’이라는 믿음으로 현장 지향적 연구 협력연구 네트워크 강화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성과 생산 고객(공무원, 도민 등)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발전연구, 6차산업화 소식지 ‘농부(農富)’ 전국 최초 창간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가 전국 최초로 6차산업화 전문 소식지를 창간했다. 올 7월호부터 계간으로 발간·배포된 소식



지 이름은 ‘농부(農富)’다.

‘농부’는 농어업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가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풍요로운 농어촌을 실현

하고픈 희망을 담고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충남로컬푸드 외식업체 인정제도 ‘미더유’, 충남 전통주 아카데미 등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사업 소개와 6차산업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충남지역 6차산업 현장 인터뷰와 다양한 소식 꾸러미 등이 실려 있다.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앞으로 ‘농부(農富)’는 충남 6차산업화 주체들 간의 정보제공 및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6차산업화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농어가, 농가공기업, 농어촌마을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충남도 6차산업화 모델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식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6차산업화센터 홈페이지(www.cdi6.re.kr)나 전화 041-840-1207로 문의하면 된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